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CONTENTS

인구 동향

고용 동향

지속가능 성장

기술 동향

이슈 분석 |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naboo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총괄	정 지 은	경제분석국장
기획·조정	박 미 정	경제분석총괄과장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 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 가 형	인구전략분석과장
	한 승 룡	경제분석관
작성	한 승 룡	경제분석관
	김 상 용	경제분석관
	천 경 록	경제분석관
	홍 지 은	경제분석관
	백 기 홍	경제분석관
지원	성 해 정	행정실무관
	강 태 용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02-6788-474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Contents

I 인구 동향

1. 인구	9
[Box 1] 총인구	12
[Box 2] 2025년 국제 인구이동 동향	14
2. 출생·사망·인구이동	16
[Box 3] 전입사유로 본 국내 인구이동	25
3. 가족	27
[Box 4] 2025년 주요국 합계출산율 동향	30

II 고용 동향

1. 고용량	35
2. 노동력 수급여건	43
3. 임금 및 가구 소득	48

III 지속가능 성장

1. 모두를 위한 물	53
2. 모두를 위한 에너지	56
3.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58
4.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60
[Box 5]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추이와 주요 요인 분석	63
5.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65

IV 기술 동향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한국 고용시장	71
---------------------	----

V 이슈 분석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85
-----------------------------	----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출생아 수는 증가세가 이어지나 혼인 감소로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충청권 일부의 순유입 등 인구이동의 지역별 차별화도 지속. 고용은 총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되었으나,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이어짐.

인구

-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7월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1%, 67.9%, 22.0%
- 5월 「출생아 수」는 2.3만명이며 2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사망자 수」는 2.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만명 증가
- 5월 「혼인 건수」는 2.0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1만건 감소
- 6월 「이동자 수」는 48.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만명 증가
 - 경기(+5.2천명), 인천(+2.2천명), 충북(+0.9천명)은 순유입, 서울(-5.7천명), 부산(-1.1천명), 대구(-0.8천명)는 순유출

고용

- 7월 「취업자 수」는 10.8만명 증가하여 직전 3개월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나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추세
 - 보건·사회복지업(+17.3만), 예술·스포츠·여가업(+4.8만)이 고용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6.8만), 건설업(-5.7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4만) 등에서는 감소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0.1%p 하락한 가운데 20대 남녀는 각각 1.5%p, 1.6%p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30대 남성 고용률도 1.1%p 하락
- 7월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청년 실업률」은 6.8%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6월 「채용」은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4만 명(20.5%) 증가
 -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 소폭(0.01%p) 상승
- 5월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증가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생활 부문에서는 대기질, 에너지효율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물 이용 효율성, 제조업 고용, 전력생산 탄소집약도 및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SDG6 모두를 위한 물) 상·하수도 보급은 개선되었으나 물 이용 효율성과 지역 격차는 과제
- (SDG7 모두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효율과 전력생산 탄소집약도는 장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최근 개선세 정체
- (SDG9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제조업과 연구개발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제조업 고용 비율은 하락
-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하고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 녹지·교통약자 인프라의 지역 격차 존재
-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 재활용 성과도 유형별 차이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전년동기대비 증감, 만명, 만가구)

	2024	2025			2026				
	연간	연간	3Q	4Q	1Q	4월	5월	6월	7월
주민등록인구	-10.8 (-0.21)	-10.7 (-0.21)	-10.0 (-0.19)	-10.0 (-0.19)	-8.2 (-0.16)	-7.8 (-0.15)	-7.4 (-0.14)	-7.3 (-0.14)	-7.2 (-0.14)
주민등록세대 수	20.4 (0.85)	18.1 (0.75)	18.1 (0.75)	18.1 (0.75)	20.1 (0.83)	21.4 (0.88)	23.0 (0.95)	23.3 (0.96)	23.6 (0.97)
출생아 수	0.8 (3.6)	0.4 (7.7)	0.3 (4.9)	1.6 (6.8)	0.9 (14.8)	0.4 (18.0)	0.3 (13.6)		
사망자 수	0.6 (1.7)	0.1 (0.6)	0.1 (1.5)	0.5 (1.3)	-0.8 (-7.6)	0.0 (-1.3)	0.1 (3.8)		
혼인 건수	2.9 (14.8)	0.3 (5.8)	0.4 (5.8)	1.8 (8.1)	0.4 (6.1)	0.2 (9.0)	-0.1 (-6.4)		
이동자 수	15.5 (2.5)	-16.6 (-2.6)	5.4 (3.6)	-11.3 (-7.5)	4.0 (2.3)	3.0 (6.3)	-0.7 (-1.5)	0.3 (0.6)	
취업자 수	15.9 (0.6)	19.3 (0.7)	21.6 (0.8)	19.5 (0.7)	18.3 (0.6)	7.4 (0.3)	-4.0 (-0.1)	6.3 (0.2)	10.8 (0.4)
월평균 채용	-7.0	-3.5	-2.0	-4.8	4.1	11.1	9.3	16.4	
실업률(%)	2.8	2.8	2.2	2.9	3.5	2.9	2.9	2.8	2.6
경제활동참가율(%)	64.5	64.7	64.9	64.6	64.1	64.9	65.2	65.2	65.0
빈일자리율(%)	1.0	0.8	0.8	0.8	0.7	0.8	0.8	0.8	
명목임금 상승률(%)	2.9	3.1	0.4	4.7	3.4	1.5	1.7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요약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09만명이며, 전년동월대비 7.2만명(-0.1%) 감소

- 주민등록인구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24.7월)-12.2(-0.2)→(‘25.7월)-10.5(-0.2)→(‘26.7월)-7.2(-0.1)

7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10.1%, 67.9%, 22.0%

- 유소년인구 비율(%): (‘24.7월)10.8→(‘25.7월)10.5→(‘26.7월)10.1
- 생산연령인구 비율(%): (‘24.7월)69.6→(‘25.7월)68.8→(‘26.7월)67.9
- 고령인구 비율(%): (‘24.7월)19.6→(‘25.7월)20.7→(‘26.7월)22.0

5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했으나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해 79개월째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출생아 수(천명): (‘24.5월)19.5→(‘25.5월)20.4→(‘26.5월)23.2
- 사망자 수(천명): (‘24.5월)28.5→(‘25.5월)28.5→(‘26.5월)29.6
- 인구의 자연증감(천명): (‘24.5월)-9.0→(‘25.5월)-8.1→(‘26.5월)-6.4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5월)3.7→(‘25.5월)0.8→(‘26.5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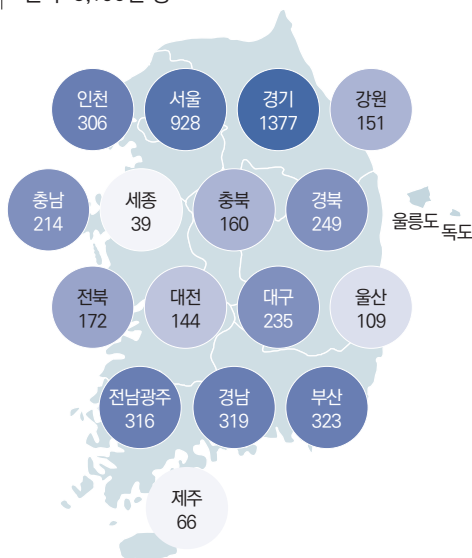
6월 이동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등락은 일정 범위 안에서 지속

- 이동자 수(천명): (‘24.6월)440→(‘25.6월)478→(‘26.6월)481

주민등록인구(2026.7.)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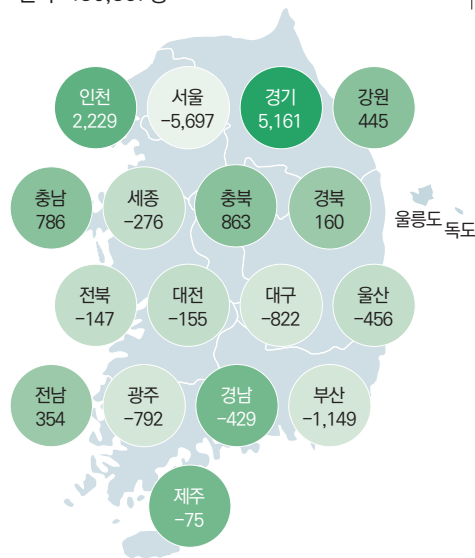
전국: 5,109만 명



순이동자 수(2026.6)

(명)

전국: 480,857명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국가데이터처

주요 용어

인구

- **총인구**: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은 제외. 총인구는 매년 작성 기준년 다음 해 7월에 공표
-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 인구를 집계하여 작성한 인구수로 외국에 유학이나 취업으로 출국한 내국인을 포함

인구 구조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유소년인구는 0~14세 인구,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 인구,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출생·사망·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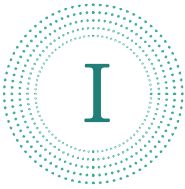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출생률**: 1년간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
- **조출생률·조사망률·조혼인율·조이혼율**: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사망자 수·혼인 건수·이혼 건수
- **인구 자연증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수치
- **기대여명**: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 0세 출생아의 기대여명이 기대수명

인구이동

- **이동자 수**: 대한민국 국민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전입신고서에 근거해 집계한 수치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전입, 특정 지역에서 나가면 전출로 구분. 시도 단위로 볼 때는 시도 경계를 넘는 시도간이동과 같은 시도 안에서 읍면동 경계를 넘는 시도내이동으로 나뉨.
- **순이동**: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으로, 전입이 전출보다 많으면 순유입, 전출이 전입보다 많으면 순유출을 의미. 지역별로는 유입·유출 방향이 갈리지만 이를 전국 단위로 합산하면 서로 상쇄되어 순이동은 0이 됨

가족·가구

- **총가구**: 총가구는 11월 1일 0시 기준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가구의 총합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구성되어 있는 가구도 포함
- **가구와 세대**: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주민등록편람). 가구와 세대의 개념적 차이는 없으나, 주민등록세대에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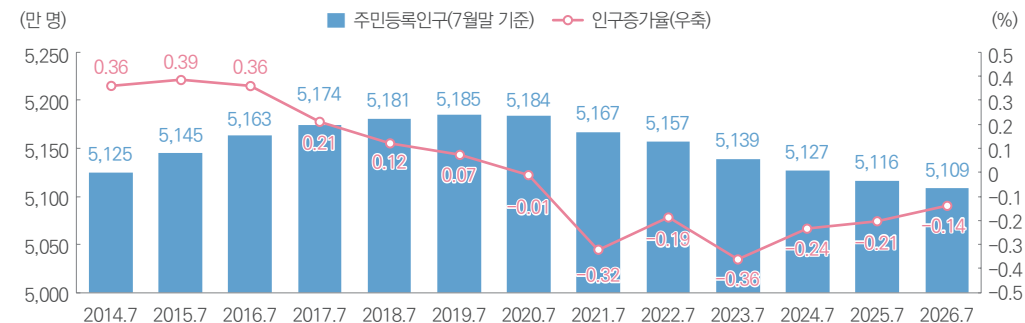
01 인구

가. 주민등록인구

➡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09만명이며, 전년동월대비 7.2만명(-0.1%) 감소

- 2026년 7월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다소 낮아짐
 - 주민등록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 ('24.7월)-12.2(-0.24)→('25.7월)-10.5(-0.21)→('26.7월)-7.2(-0.14)

그림 1 |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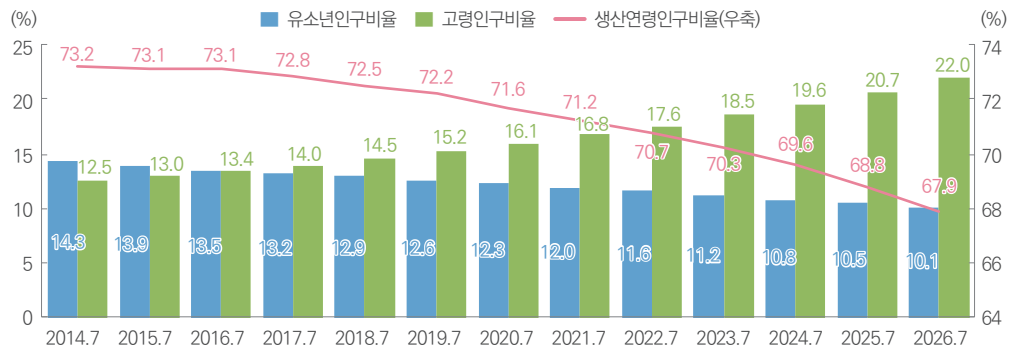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7월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은 각각 10.1%, 67.9%, 22.0%

-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1%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유소년 인구 비율(%): ('24.7월)10.8→('25.7월)10.5→('26.7월)10.1
- 생산연령 인구 비율은 67.9%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 생산연령 인구 비율(%): ('24.7월)69.6→('25.7월)68.8→('26.7월)67.9
- 고령 인구 비율은 22.0%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고령인구 비율(%): ('24.7월)19.6→('25.7월)20.7→('26.7월)22.0

그림 2 |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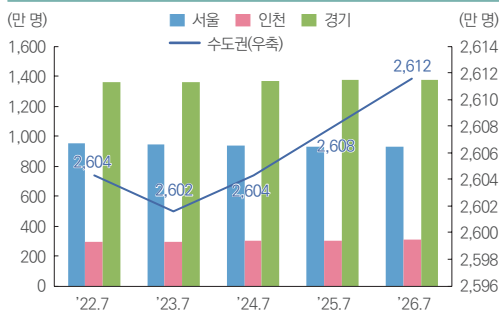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 단위로는 수도권, 충청권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그 밖의 지역은 인구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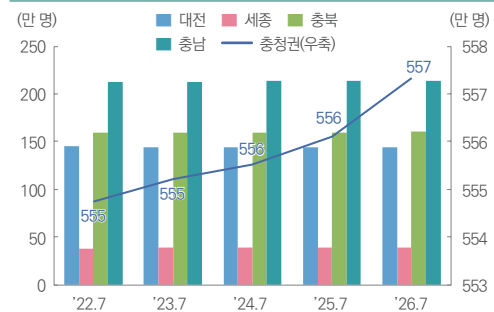
- 서울 인구는 감소하지만, 인천과 경기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수도권^[1] 인구는 2,61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4%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24.7월)2,604→('25.7월)2,608→('26.7월)2,612
 - 서울 인구(만명): ('24.7월)936→('25.7월)932→('26.7월)928
 - 인천 인구(만명): ('24.7월)301→('25.7월)304→('26.7월)306
 - 경기 인구(만명): ('24.7월)1,367→('25.7월)1,372→('26.7월)1,377
- 충청권^[2] 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여 5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2% 증가
 - 충청권 인구(만명): ('24.7월)556→('25.7월)556→('26.7월)557
 - 대전 인구(만명): ('24.7월)144→('25.7월)144→('26.7월)144
 - 세종 인구(만명): ('24.7월)39→('25.7월)39→('26.7월)39
 - 충북 인구(만명): ('24.7월)159→('25.7월)159→('26.7월)160
 - 충남 인구(만명): ('24.7월)214→('25.7월)214→('26.7월)214

그림 3 | 수도권 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 | 충청권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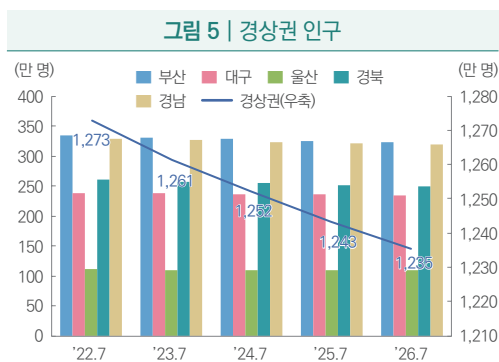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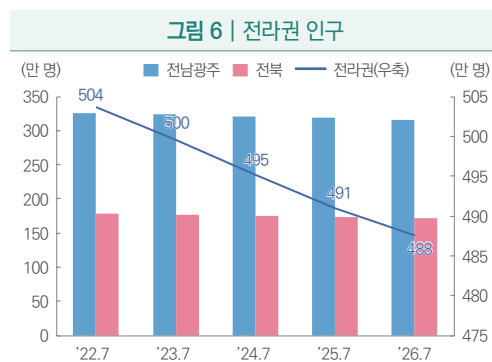
[1]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구성

[2]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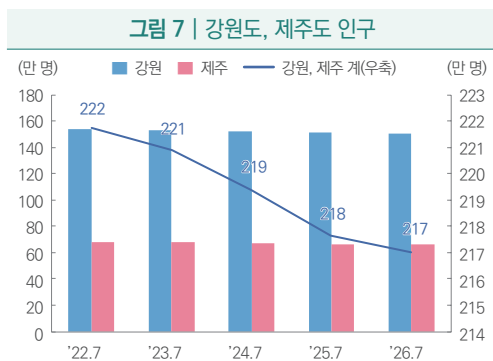
- 경상권^[3]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1,2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64% 감소
 - 경상권 인구(만명): ('24.7월)1,252→('25.7월)1,243→('26.7월)1,235
 - 부산 인구(만명): ('24.7월)328→('25.7월)325→('26.7월)323
 - 대구 인구(만명): ('24.7월)237→('25.7월)236→('26.7월)235
 - 울산 인구(만명): ('24.7월)110→('25.7월)109→('26.7월)109
 - 경북 인구(만명): ('24.7월)254→('25.7월)252→('26.7월)249
 - 경남 인구(만명): ('24.7월)324→('25.7월)321→('26.7월)319
- 전라권^[4]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48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0% 감소
 - 전라권 인구(만명): ('24.7월)495→('25.7월)491→('26.7월)488
 - 전남광주 인구(만명): ('24.7월)321→('25.7월)318→('26.7월)316
 - 전북 인구(만명): ('24.7월)174→('25.7월)173→('26.7월)172
- 강원도와 제주도의 인구는 감소 추세로 각각 151만명, 66만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19%, 0.53% 감소
 - 강원 인구(만명): ('24.7월)152→('25.7월)151→('26.7월)151
 - 제주 인구(만명): ('24.7월)67→('25.7월)67→('26.7월)6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3] 경상권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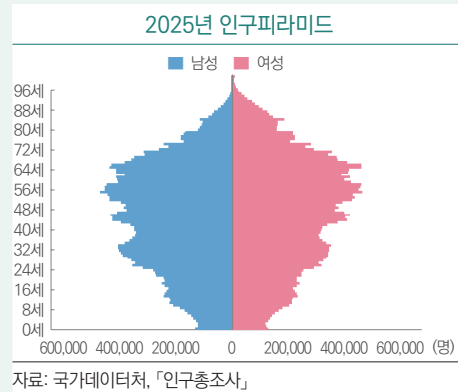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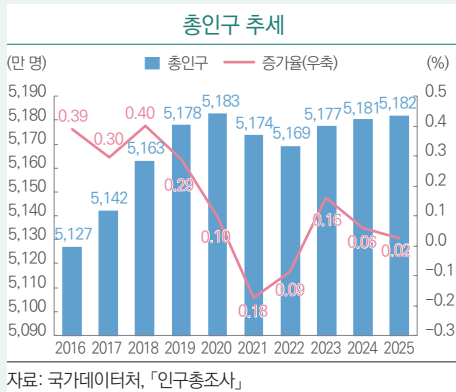
[4] 전라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

[Box 1] 총인구

※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인구총조사」 주요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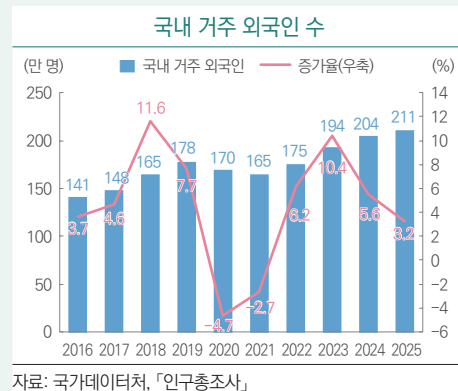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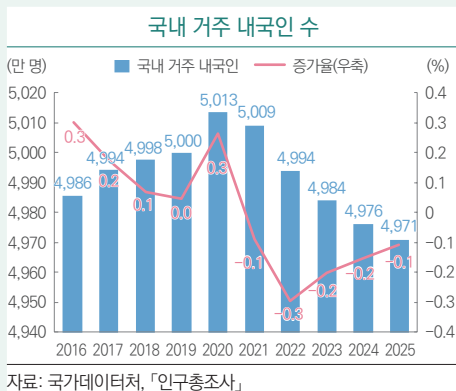
➡ 2025년 총인구는 5,182만명이며, 전년대비 0.02% 증가

- 총인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
 - 총인구 증감(전년대비, 만명(증감률)): ('23)8(0.2)→('24)3(0.1)→('25)1(0.0)
- 2025년 인구피라미드는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확대되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양상



➡ 2025년 국내 거주 내국인과 외국인인 각각 4,971만명, 211만명

- 국내 거주 내국인은 2020년 5,013만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유지
 - 국내 거주 내국인 수 증가율(전년대비, %): ('23)-0.2→('24)-0.2→('25)-0.1
- 국내 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약해진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5년 기준 총인구의 4.1%를 차지
 - 국내 거주 외국인 수 증가율(전년대비, %): ('23)10.4→('24)5.6→('2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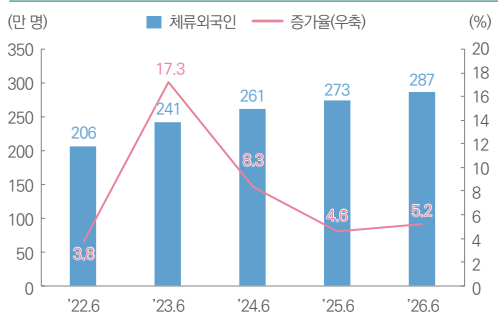


나. 체류외국인

➡ 6월 말 국내 체류외국인은 28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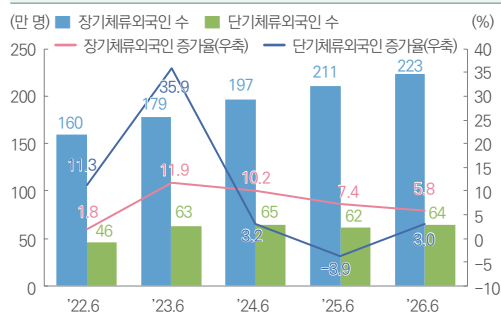
-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인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체류외국인 수(만명): ('24.6월)261→('25.6월)273→('26.6월)287
 - 체류외국인 증가율(%): ('24.6월)8.3→('25.6월)4.6→('26.6월)5.2
 - 장기체류 외국인 수(만명): ('24.6월)197→('25.6월)211→('26.6월)223
 - 단기체류 외국인 수(만명): ('24.6월)65→('25.6월)62→('26.6월)64

그림 8 | 체류 외국인 수 및 증가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그림 9 |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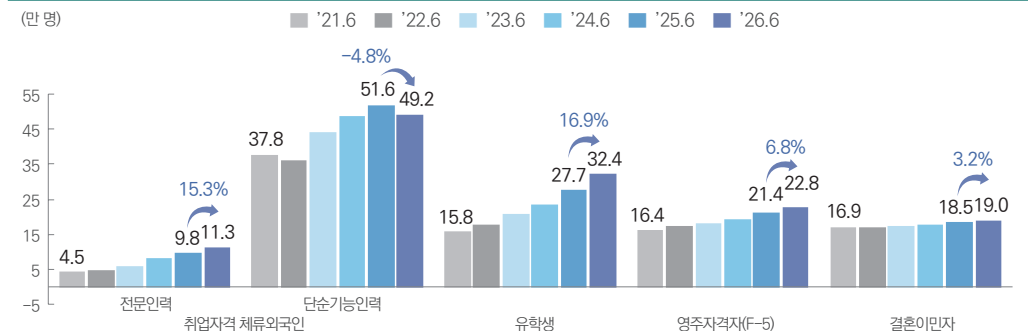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 전문인력 외국인과 유학생의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단순기능인력은 4년만에 전년대비 감소

- 6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체류자격별로 전문인력 취업자격 외국인은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 단순기능 취업자격 외국인은 4.8% 감소했으며, 유학생은 16.9%, 영주권자는 6.8%, 결혼이민자는 3.2% 증가
 - 취업자격 외국인은 60만명이며, 유학생은 32만명, 영주자격자 23만명, 결혼이민자 19만명 순

그림 10 | 체류 자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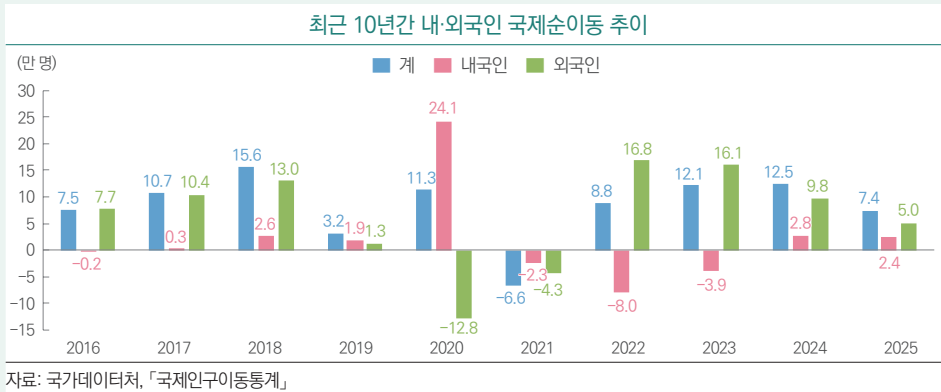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Box 2] 2025년 국제 인구이동 동향

※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주요 결과 요약(2026년 7월 9일 발표)

🔄 국제순이동은 7.4만명으로 전년대비 4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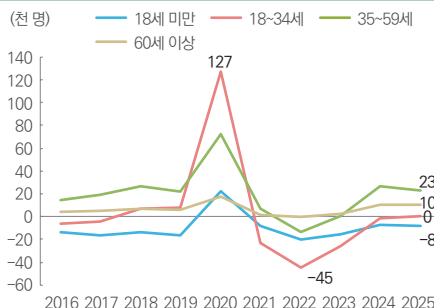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국제순이동은 연평균 8.3만명 수준이었으며, 2021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입국자 수가 출국자 수를 상회하여 양(+)의 순이동 추세를 유지
- 2025년 국제순이동은 외국인 순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년의 12.5만명 대비 5.1만명 감소
 - 외국인 입국자 수는 42.8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만명 감소한 반면, 출국자 수는 37.8만명으로 2.5만 명 증가하여 순이동자 수는 4.8만명 감소
 -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1.8만 명 감소했으며, 사증면제를 통한 외국인 입국자도 전년대비 1.2만 명 감소



🔄 내국인 국제순이동은 중장년층이, 외국인은 청년층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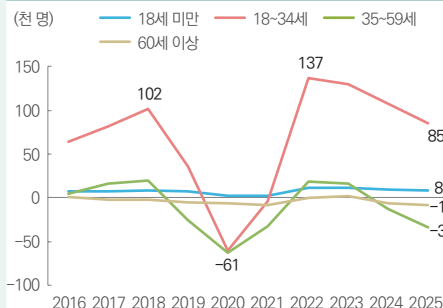
- 내국인 국제순이동은 35~59세 2.3만명, 60세 이상 1.0만명, 18~34세 0만명, 18세 미만 -0.8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외국인 국제순이동은 18~34세 8.5만명, 18세 미만 0.8만명, 60세 이상 -1.0만명, 35~59세 -3.4만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내국인 연령대별 국제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외국인 연령대별 국제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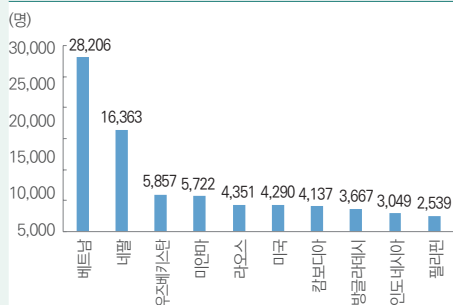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 외국인 국적별 국제순유입은 베트남(2.8만명), 네팔(1.6만명), 우즈베키스탄(0.6만명)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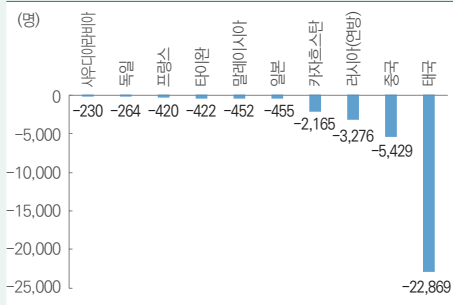
- 외국인 국적별 국제순유출은 태국(-2.3만명), 중국(-0.5만명), 러시아(-0.3만명) 순

출신국가별 외국인 국제순이동 상위 10개국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출신국가별 외국인 국제순이동 하위 10개국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제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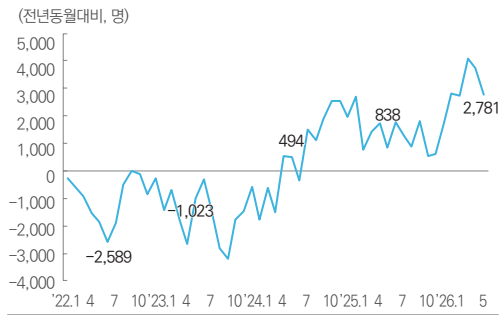
02 출생·사망·인구이동

가. 출생

➡ 5월 출생아 수는 2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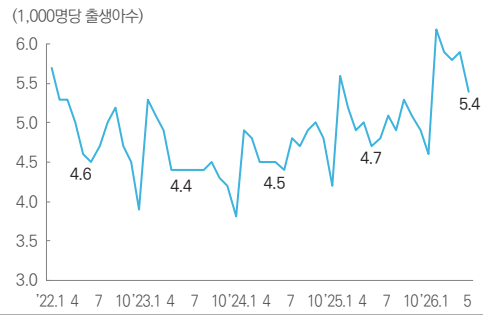
- 5월 출생아 수는 23,16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81명(13.6%) 증가
 -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24.5월)0.5→('25.5월)0.8→('26.5월)2.8
- 5월 조출생률은 5.4명으로 5월 기준으로는 2019년(5.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년동월대비 0.7명 증가
 - 조출생률(명): ('24.5월)4.5→('25.5월)4.7→('26.5월)5.4

그림 11 |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2 | 조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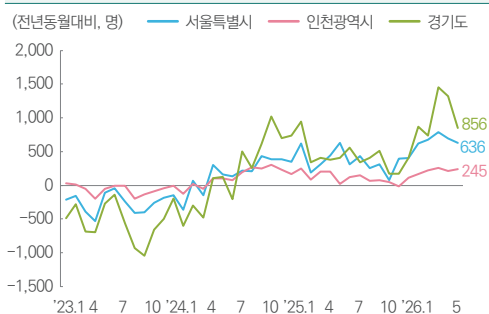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지역 단위 출생아 수 증감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년동월대비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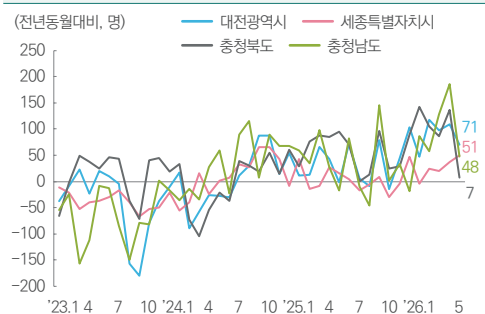
- 수도권 지역의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며 출생아 수 12,825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7% 증가
 - 서울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61→('25.5월)636→('26.5월)636
 - 인천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04→('25.5월)20→('26.5월)245
 - 경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20→('25.5월)408→('26.5월)856
- 충청권은 지역별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 증가 추세이며, 출생아 수 2,532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대전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8→('25.5월)-2→('26.5월)71
 - 세종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25.5월)16→('26.5월)51
 - 충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1→('25.5월)96→('26.5월)7
 - 충남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59→('25.5월)-17→('26.5월)48

그림 13 | 수도권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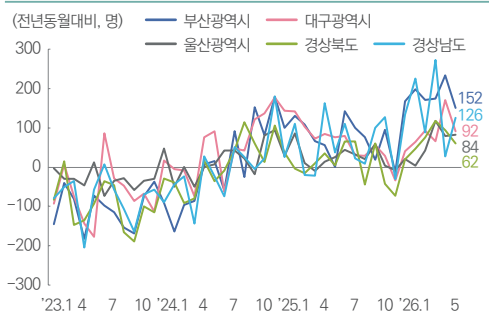
그림 14 | 충청권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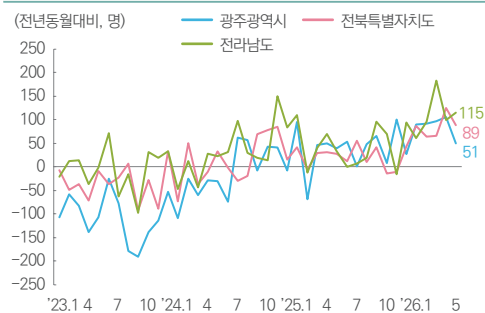
- 경상권 또한 지역별 등락 속 전반적 증가 추세로, 출생아 수 4,90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부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5→('25.5월)0→('26.5월)152
 - 대구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92→('25.5월)76→('26.5월)92
 - 울산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7→('25.5월)25→('26.5월)84
 - 경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35→('25.5월)5→('26.5월)62
 - 경남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3→('25.5월)38→('26.5월)126
- 전라권은 출생아 수 2,04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
 - 광주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31→('25.5월)40→('26.5월)51
 - 전북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32→('25.5월)28→('26.5월)89
 - 전남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3→('25.5월)33→('26.5월)115
- 강원도는 전년동월대비 감소가 이어지다 증가로 전환한 반면 제주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출생아 수 각각 603명(전년동월대비 +20.6%), 252명(-3.1%)
 - 강원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1→('25.5월)-32→('26.5월)103
 - 제주 출생아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8→('25.5월)-23→('26.5월)-8

그림 15 | 경상권 출생아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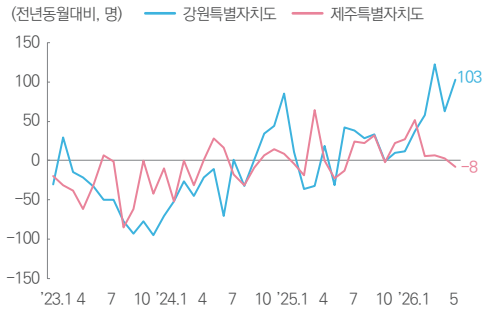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6 | 전라권 출생아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7 | 강원도, 제주도 출생아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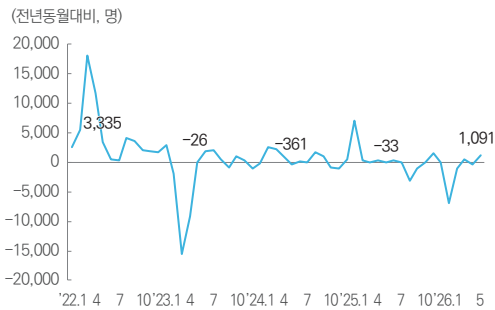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나. 사망

➡ 5월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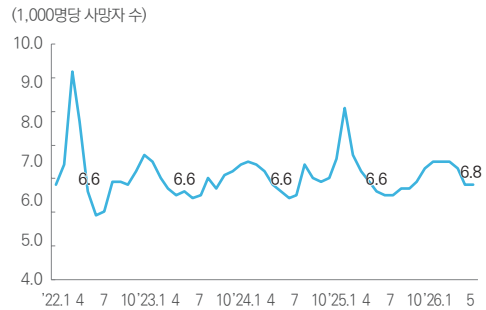
- 5월 사망자 수는 29,57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1명(3.8%) 증가
 -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명): ('24.5월)-0.3→('25.5월)0.0→('26.5월)1.1
- 5월 조사망률은 6.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명 증가
 - 조사망률(명): ('24.5월)6.6→('25.5월)6.6→('26.5월)6.8

그림 18 |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19 | 조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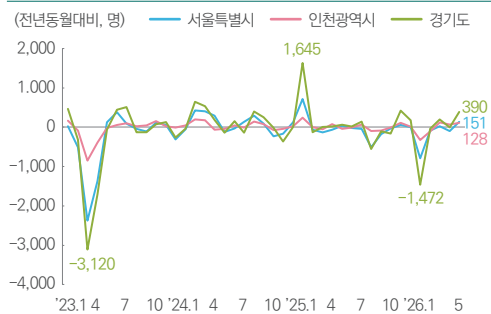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지역 단위 사망자 수는 전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며, 절대 규모와 증가폭 모두 수도권이 가장 컸음

- 수도권은 사망자 수 12,47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며 권역 중 증가폭이 가장 컸음
 - 서울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09→('25.5월)45→('26.5월)151
 - 인천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30→('25.5월)-36→('26.5월)128
 - 경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39→('25.5월)68→('26.5월)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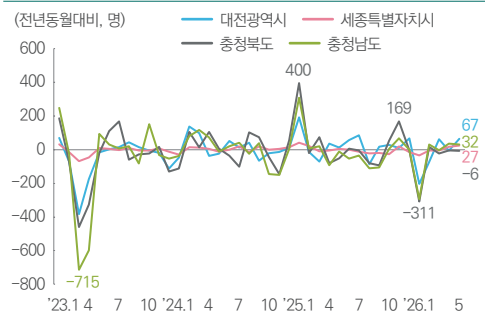
- 충청권은 사망자 수 3,546명으로 2025년 소폭 감소 후 반등하여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대전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3→('25.5월)15→('26.5월)67
 - 세종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1→('25.5월)7→('26.5월)27
 - 충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5→('25.5월)-53→('26.5월)-6
 - 충남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0→('25.5월)-10→('26.5월)32

그림 20 | 수도권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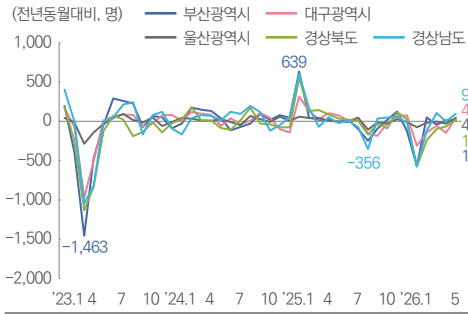
그림 21 | 충청권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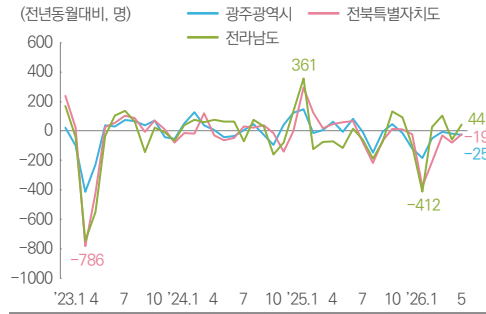
- 경상권은 사망자 수 8,33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하여 완만한 증가세
 - 부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40→('25.5월)-8→('26.5월)15
 - 대구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54→('25.5월)80→('26.5월)47
 - 울산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34→('25.5월)-2→('26.5월)49
 - 경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85→('25.5월)37→('26.5월)19
 - 경남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14→('25.5월)-21→('26.5월)97
- 전라권은 사망자 수 3,647명으로 권역 중 유일하게 증가하지 않았음
 - 광주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42→('25.5월)-4→('26.5월)-25
 - 전북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61→('25.5월)61→('26.5월)-19
 - 전남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64→('25.5월)-116→('26.5월)44
-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사망자 수 1,171명, 403명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4.6%, 6.9% 증가하였으며 2025년 감소 후 증가로 전환
 - 강원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6→('25.5월)-63→('26.5월)52
 - 제주 사망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4.5월)20→('25.5월)-35→('26.5월)26

그림 22 | 경상권 사망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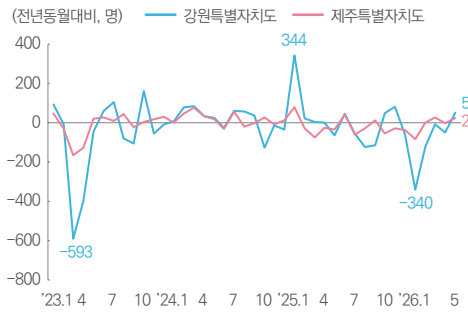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3 | 전라권 사망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4 | 강원도, 제주도 사망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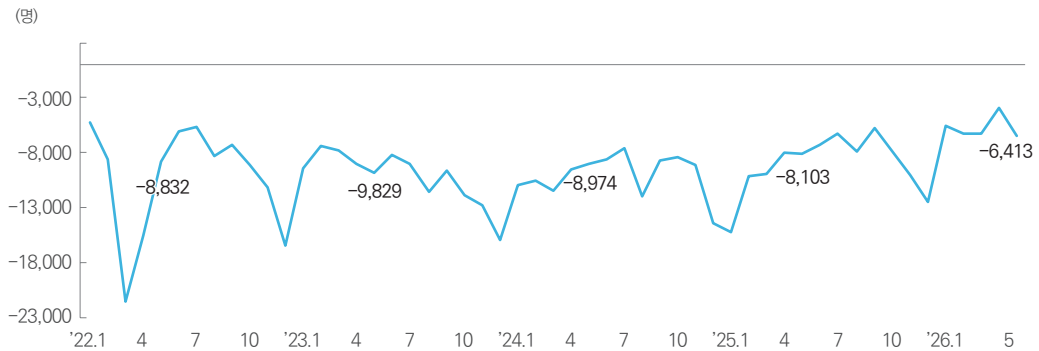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다. 자연감소

➡ 5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79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 지속

- 5월 자연감소는 6,41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이 1,690명 축소
 - 인구의 자연증감(천명): ('24.5월)-9.0→('25.5월)-8.1→('26.5월)-6.4

그림 25 |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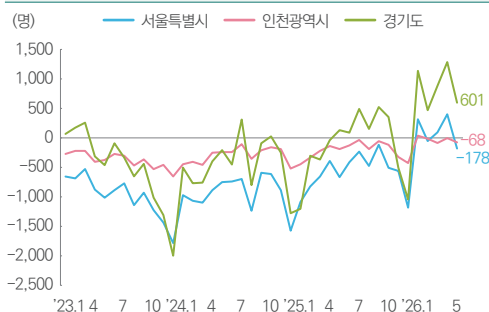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지역 단위 자연증감은 대부분 권역에서 자연감소 폭이 축소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경기도 주도로 자연증가로 전환한 반면 제주는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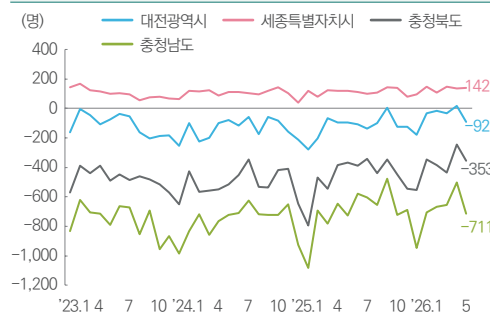
- 수도권은 자연감소가 이어지다 2026년 5월 자연증가로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고, 경기도가 이를 견인한 반면 서울·인천은 여전히 자연감소
 - 서울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746→('25.5월)-664→('26.5월)-178
 - 인천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241→('25.5월)-186→('26.5월)-68
 - 경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206→('25.5월)134→('26.5월)601
- 충청권은 자연감소 폭이 완만히 축소되었으며, 세종은 권역 내 유일하게 자연증가 유지
 - 대전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79→('25.5월)-97→('26.5월)-92
 - 세종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109→('25.5월)118→('26.5월)142
 - 충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515→('25.5월)-366→('26.5월)-353
 - 충남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720→('25.5월)-727→('26.5월)-711

그림 26 | 수도권 인구의 자연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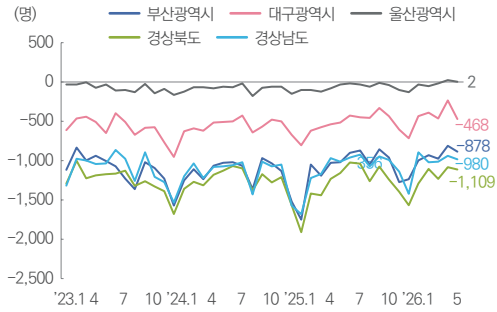
그림 27 | 충청권 인구의 자연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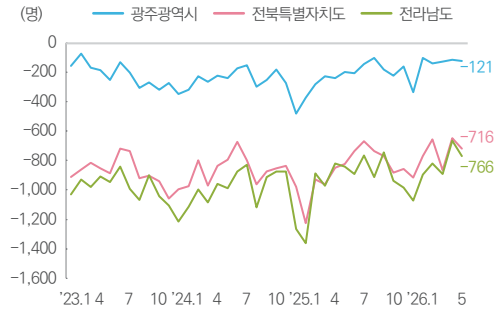
- 경상권은 자연감소 폭이 완만히 축소되었으며, 울산이 자연증가로 전환
 - 부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1,023→('25.5월)-1,015→('26.5월)-878
 - 대구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510→('25.5월)-514→('26.5월)-468
 - 울산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59→('25.5월)-32→('26.5월)2
 - 경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1,119→('25.5월)-1,151→('26.5월)-1,109
 - 경남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1,068→('25.5월)-1,010→('26.5월)-980
- 전라권은 지속적으로 자연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폭은 축소
 - 광주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241→('25.5월)-197→('26.5월)-121
 - 전북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791→('25.5월)-824→('26.5월)-716
 - 전남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986→('25.5월)-837→('26.5월)-766
- 강원도와 제주도는 자연감소 폭 축소가 가장 더뎠고, 제주는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악화
 - 강원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650→('25.5월)-619→('26.5월)-568
 - 제주 인구의 자연증감(명): ('24.5월)-129→('25.5월)-117→('26.5월)-151

그림 28 | 경상권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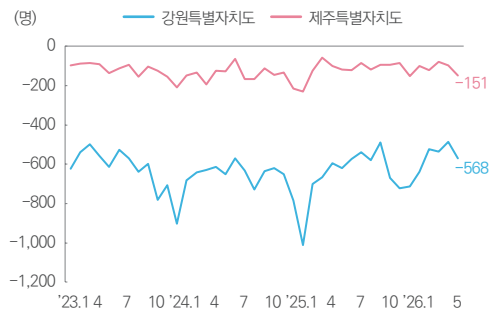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29 | 전라권 인구의 자연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0 | 강원도, 제주도 인구의 자연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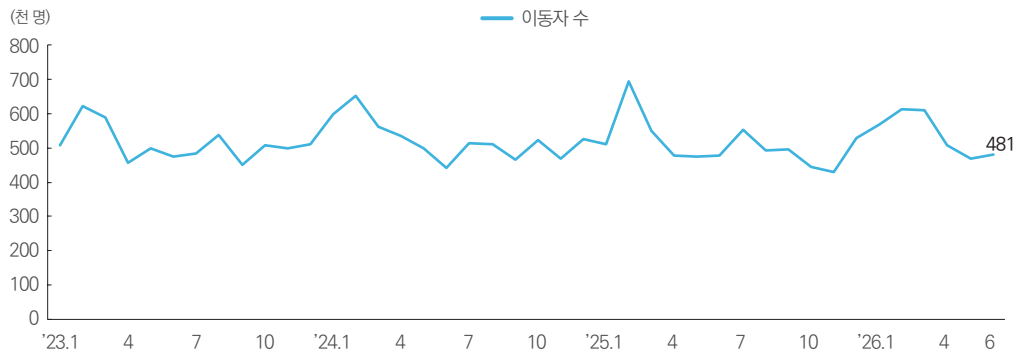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라. 인구이동

➡ 이동자 수는 뚜렷한 추세적 증가 및 감소 없이 일정 범위 안에서 계절적 등락이 반복

- 6월 이동자 수는 4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천명, 0.6% 증가
- 이동자 수(천명): ('24.6월)440→('25.6월)478→('26.6월)481

그림 31 | 이동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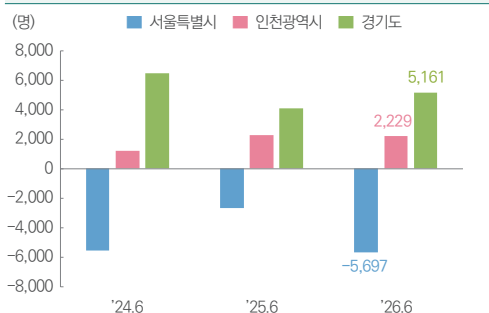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인구 순이동은 경기도가 전 기간 순유입을 주도하고 서울이 가장 큰 순유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대부분은 순유출이나 6월 경북·전남·강원이 순유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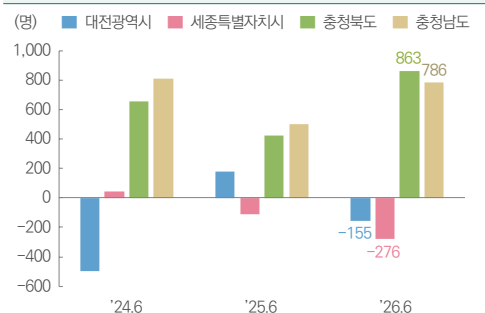
- 수도권은 경기·인천의 순유입과 서울의 대규모 순유출이 대비
 - 서울 인구 순이동(명): ('24.6월)-5,558→('25.6월)-2,676→('26.6월)-5,697
 - 인천 인구 순이동(명): ('24.6월)1,196→('25.6월)2,278→('26.6월)2,229
 - 경기 인구 순이동(명): ('24.6월)6,490→('25.6월)4,120→('26.6월)5,161
- 충청권은 충북·충남이 순유입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종은 순유출로 전환 및 확대
 - 대전 인구 순이동(명): ('24.6월)-499→('25.6월)182→('26.6월)-155
 - 세종 인구 순이동(명): ('24.6월)43→('25.6월)-113→('26.6월)-276
 - 충북 인구 순이동(명): ('24.6월)656→('25.6월)424→('26.6월)863
 - 충남 인구 순이동(명): ('24.6월)810→('25.6월)504→('26.6월)786

그림 32 | 수도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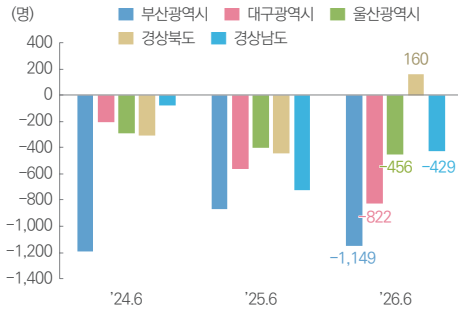
그림 33 | 충청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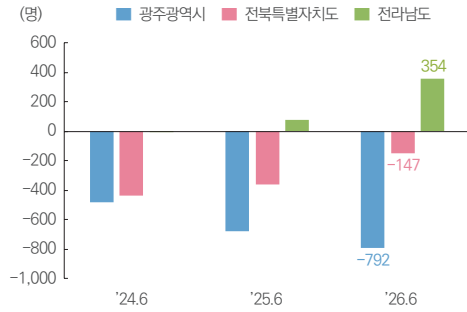
- 경상권은 대부분 지역이 순유출로 경북만 순유입으로 전환
 - 부산 인구 순이동(명): ('24.6월)-1,192→('25.6월)-868→('26.6월)-1,149
 - 대구 인구 순이동(명): ('24.6월)-208→('25.6월)-562→('26.6월)-822
 - 울산 인구 순이동(명): ('24.6월)-293→('25.6월)-403→('26.6월)-456
 - 경북 인구 순이동(명): ('24.6월)-311→('25.6월)-446→('26.6월)160
 - 경남 인구 순이동(명): ('24.6월)-81→('25.6월)-722→('26.6월)-429
- 전라권은 전남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반면 광주 순유출이 확대되고 전북은 유출 폭 축소
 - 광주 인구 순이동(명): ('24.6월)-486→('25.6월)-675→('26.6월)-792
 - 전북 인구 순이동(명): ('24.6월)-434→('25.6월)-365→('26.6월)-147
 - 전남 인구 순이동(명): ('24.6월)-5→('25.6월)73→('26.6월)354
- 강원도는 순유입으로 크게 전환되고 제주도는 순유출 폭이 크게 축소
 - 강원 인구 순이동(명): ('24.6월)108→('25.6월)-237→('26.6월)445
 - 제주 인구 순이동(명): ('24.6월)-236→('25.6월)-514→('26.6월)-75

그림 34 | 경상권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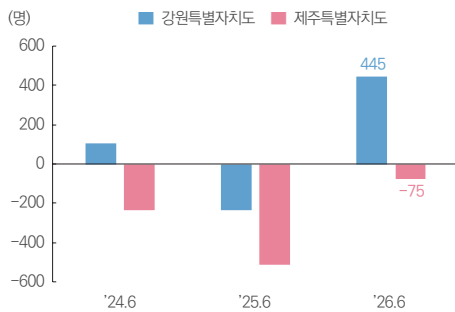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5 | 전라권 인구 순이동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그림 36 | 강원도, 제주도 인구 순이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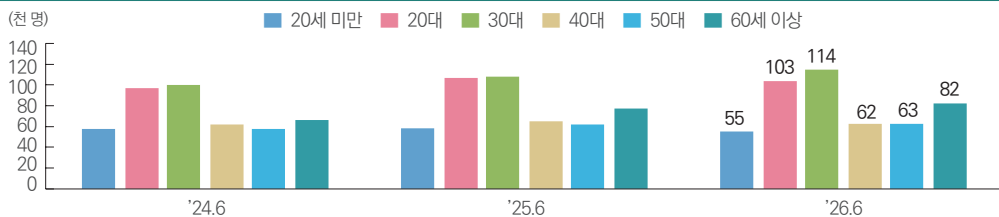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연령별 이동은 20~30대가 주도하는 가운데, 40~50대는 정체, 60세 이상은 소폭 증가

- 30대가 11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반면 50대는 6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여 큰 변동 없이 이어짐
- 20세 미만 이동자 수(천명): ('24.6월)58→('25.6월)58→('26.6월)55
- 20대 이동자 수(천명): ('24.6월)97→('25.6월)107→('26.6월)103
- 30대 이동자 수(천명): ('24.6월)100→('25.6월)108→('26.6월)114
- 40대 이동자 수(천명): ('24.6월)62→('25.6월)65→('26.6월)62
- 50대 이동자 수(천명): ('24.6월)58→('25.6월)62→('26.6월)63
- 60세 이상 이동자 수(천명): ('24.6월)66→('25.6월)78→('26.6월)82

그림 37 | 연령별 이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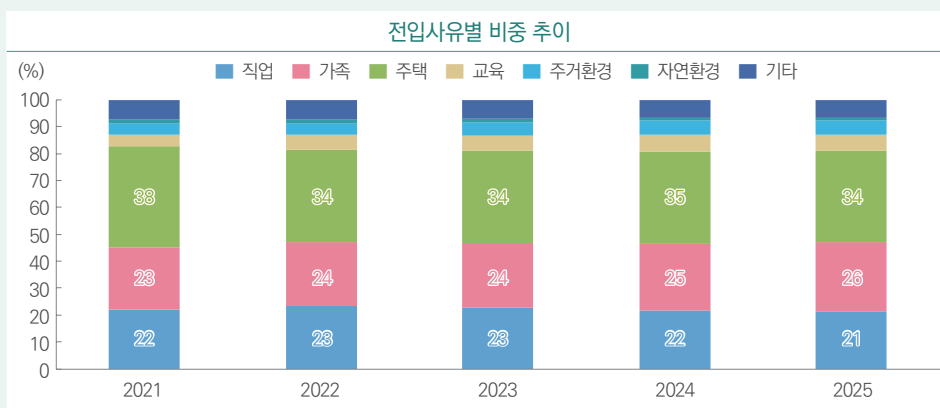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Box 3] 전입사유로 본 국내 인구이동

➡ 최근 5년간 국내이동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가족·직업 순이며, 주택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가족으로 인한 이동의 비중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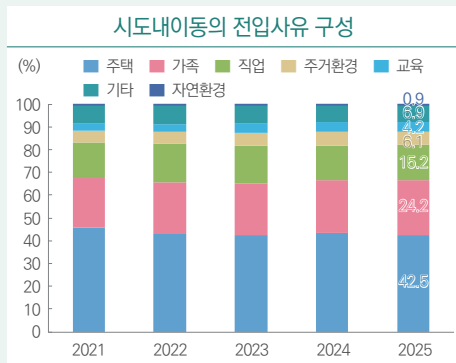
- 주택·가족·직업 사유의 합계 비중은 2021년 83%에서 2025년 81%로 80% 이상 유지
 - 주택으로 인한 이동(%): ('21)38→('22)34→('23)34→('24)35→('25)34
 - 가족으로 인한 이동(%): ('21)23→('22)24→('23)24→('24)25→('25)26
 - 직업으로 인한 이동(%): ('21)22→('22)23→('23)23→('24)22→('2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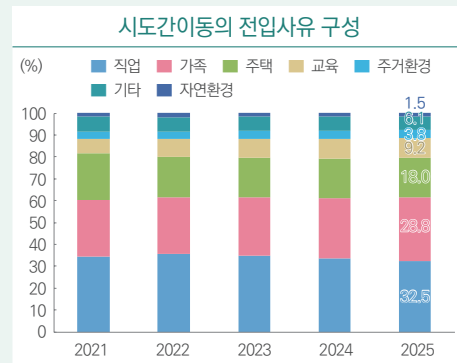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이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전입의 주된 사유가 주택에서 직업으로 전환

- 시도내이동은 주거 목적이 지배적으로 최근 5년간 전입사유로 주택이 40% 이상
 - 주택으로 인한 이동(%): ('21)45.9 → ('22)43.0 → ('23)42.6 → ('24)43.2 → ('25)42.5
 - 가족으로 인한 이동(%): ('21)21.6 → ('22)22.6 → ('23)22.7 → ('24)23.2 → ('25)24.2
 - 직업으로 인한 이동(%): ('21)15.6 → ('22)16.7 → ('23)16.2 → ('24)15.4 → ('25)15.2
- 시도간이동은 직업이 목적인 경우의 비중이 가장 크며, 가족 사유로 인한 전입 비중이 증가 추세
 - 직업으로 인한 이동(%): ('21)34.5 → ('22)35.6 → ('23)35.1 → ('24)33.5 → ('25)32.5
 - 가족으로 인한 이동(%): ('21)25.6 → ('22)25.7 → ('23)26.6 → ('24)27.6 → ('25)28.8
 - 주택으로 인한 이동(%): ('21)21.5 → ('22)18.6 → ('23)18.0 → ('24)18.1 → ('25)18.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권역 내 이동은 주택, 권역 간 이동은 직업이 1순위이며 가족은 전출 및 전입 방향과 무관하게 2순위 이내로 고정

- 권역 내 이동은 5개 권역 모두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많음
- 타 권역으로의 이동 목적은 대부분 직업이 1순위로 원거리 이동일수록 뚜렷
- 수도권과 타 지역 간에는 방향별 비대칭 패턴 관찰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모두 직업이 1순위이며 특히 경상권 발 이동에서 직업이 압도적
 - 수도권에서 경상권 및 전라권으로의 전출은 가족이 1순위
- 전입사유로 가족은 모든 경우 1위 또는 2위를 유지
 - 사유의 위계가 주택 혹은 직업으로 갈릴 때 가족이 안정적 2순위로 완충

2025년 권역 간 전출·전입별 이동사유 1·2순위					
전입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제주
수도권	주택 가족	직업 가족	가족 직업	가족 직업	직업 가족
충청권	직업 가족	주택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경상권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주택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전라권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주택 가족	직업 가족
강원·제주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직업 가족	주택 가족

주: 셀 내 사유는 이동 규모 순으로, 상단이 1순위, 하단이 2순위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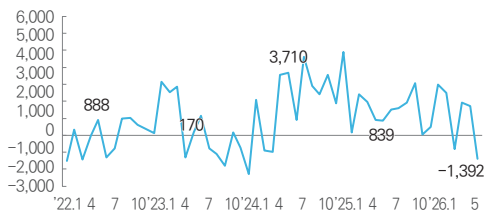
가. 혼인 및 이혼

➡ 5월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4천건 감소하여 2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 5월 혼인 건수는 20,36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92건 감소
- 혼인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5월)3.7→('25.5월)0.8→('26.5월)-1.4
- 5월 조혼인율^[5]은 4.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3명 감소
- 조혼인율(명): ('24.5월)4.8→('25.5월)5.0→('26.5월)4.7

그림 38 | 혼인 건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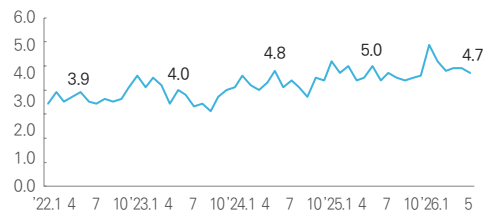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천)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39 | 조혼인율

(1,000명당 혼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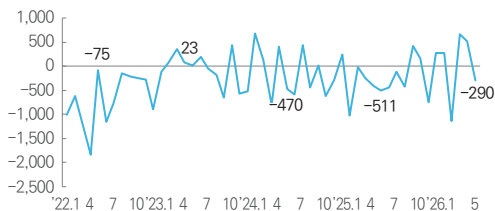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5월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이혼 건수는 7,12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90건 감소
- 이혼 건수 증감(전년동월대비, 천건): ('24.5월)-0.5→('25.5월)-0.5→('26.5월)-0.3
- 5월 조이혼율^[6]은 1.6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명 감소
- 조이혼율(명): ('24.5월)1.8→('25.5월)1.7→('26.5월)1.6

그림 40 | 이혼 건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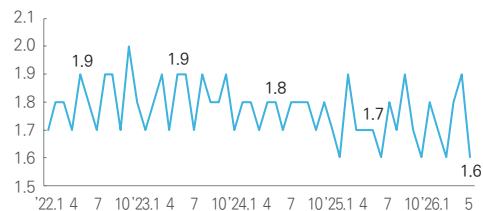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천)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그림 41 | 조이혼율

(1,000명당 이혼건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5]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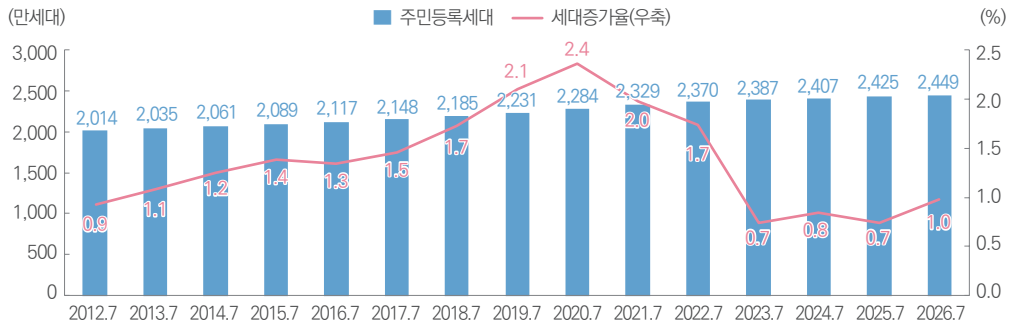
[6]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

나. 가구 수

7월 주민등록세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 내외로 유지

- 7월 주민등록세대는 2,449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4만세대 증가
 - 주민등록세대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세대(%)): ('24.7월)20.1(0.8)→('25.7월)17.6(0.7)→('26.7월)23.6(1.0)

그림 42 | 주민등록세대 및 세대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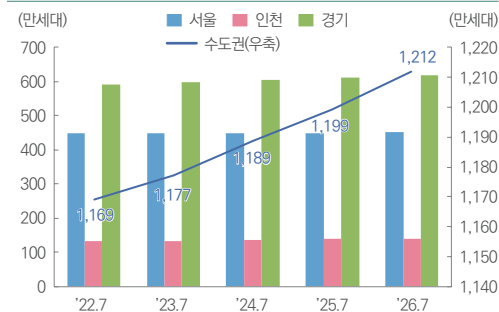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지역 단위로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등록세대 수가 증가

- 수도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1,212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수도권 (만세대): ('24.7월)1,189→('25.7월)1,199→('26.7월)1,212
 - 서울 (만세대): ('24.7월)449→('25.7월)450→('26.7월)452
 - 인천 (만세대): ('24.7월)137→('25.7월)139→('26.7월)142
 - 경기 (만세대): ('24.7월)603→('25.7월)610→('26.7월)618
- 충청권 모든 지역의 세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청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275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
 - 충청권 (만세대): ('24.7월)268→('25.7월)271→('26.7월)275
 - 대전 (만세대): ('24.7월)69→('25.7월)69→('26.7월)71
 - 세종 (만세대): ('24.7월)16→('25.7월)17→('26.7월)17
 - 충북 (만세대): ('24.7월)79→('25.7월)79→('26.7월)81
 - 충남 (만세대): ('24.7월)105→('25.7월)106→('26.7월)107
- 경상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607만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8%증가
 - 경상권 (만세대): ('24.7월)599→('25.7월)602→('26.7월)607
 - 부산 (만세대): ('24.7월)157→('25.7월)157→('26.7월)158
 - 대구 (만세대): ('24.7월)110→('25.7월)111→('26.7월)112
 - 울산 (만세대): ('24.7월)49→('25.7월)50→('26.7월)50
 - 경북 (만세대): ('24.7월)129→('25.7월)130→('26.7월)130
 - 경남 (만세대): ('24.7월)153→('25.7월)155→('26.7월)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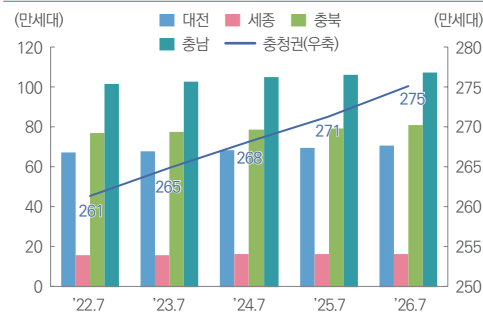
- 전라권 주민등록세대 수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여 245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전라권 (만세대): ('24.7월)243→('25.7월)244→('26.7월)245
 - 전남광주 (만세대): ('24.7월)157→('25.7월)157→('26.7월)158
 - 전북 (만세대): ('24.7월)86→('25.7월)87→('26.7월)87
- 강원도와 제주도의 주민등록세대 수는 각각 78만 세대, 32만 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 0.7% 증가
 - 강원 (만세대): ('24.7월)76→('25.7월)77→('26.7월)78
 - 제주 (만세대): ('24.7월)31→('25.7월)32→('26.7월)32

그림 43 | 수도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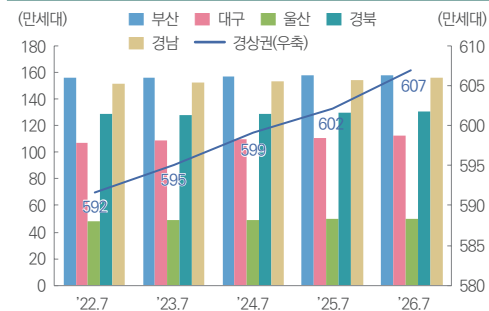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4 | 충청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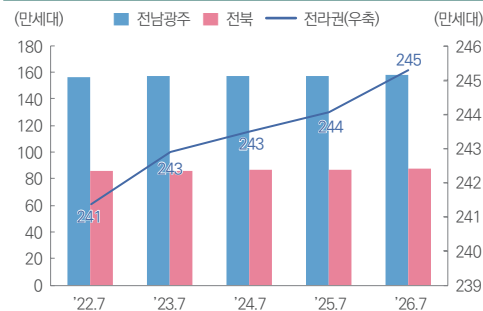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5 | 경상권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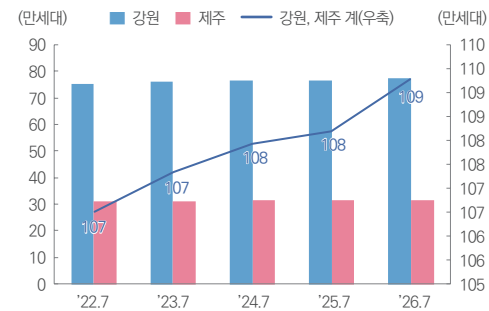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6 | 전라권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그림 47 | 강원도, 제주도 세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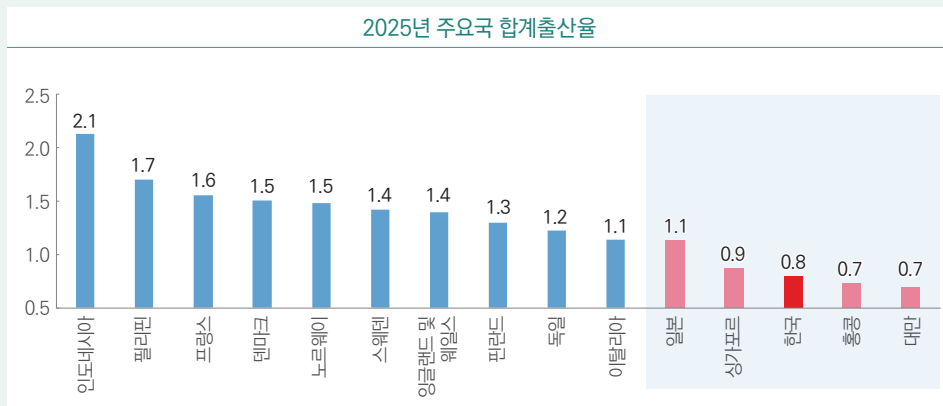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Box 4] 2025년 주요국 합계출산율 동향

➡ 2025년 주요국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그 중 아시아 국가의 초저출산이 두드러짐

- 2025년 합계출산율 잠정치 발표한 국가 중, 한국·홍콩·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지역은 1명 미만 또는 1명 안팎의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 대만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약 0.70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0.80명, 0.73명, 0.87명으로 1명을 하회
 - 일본은 동아시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1.14명)을 기록하였으나, 세계적으로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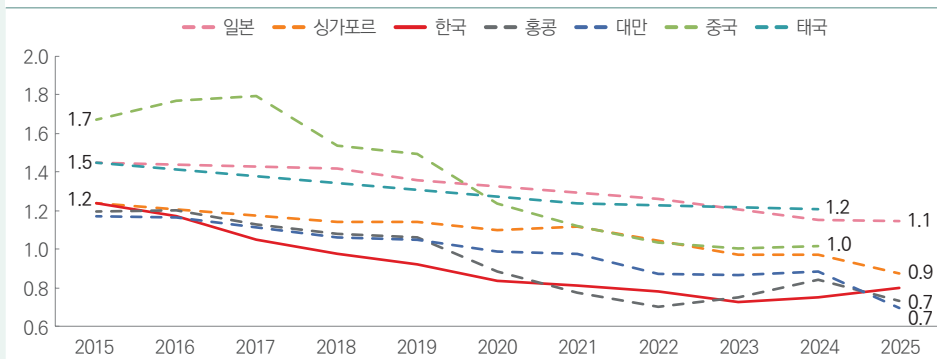


주: 2025년 잠정치 혹은 확정치가 존재하는 나라만 비교
자료: 각국 통계청

➡ 아시아의 낮은 출산율은 지난 10년간 이어진 하락 흐름의 결과

- 한국뿐 아니라 대만·홍콩·싱가포르·중국·태국 등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져 저출산 또는 초저출산이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23년 0.72명까지 낮아진 뒤, 2025년 0.8명으로 반등
 - 대만은 2024년 0.89명에서 2025년 0.695명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도 각각 2024년 0.84명, 0.97명에서 2025년 0.73명, 0.87명으로 0.1명 이상 감소
 -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1명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
 - 태국도 2024년에 1.20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25년 출생아 수는 41.6만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

아시아 합계출산율 추이



주: 1) 2025년은 잠정치 혹은 확정치가 존재하는 나라만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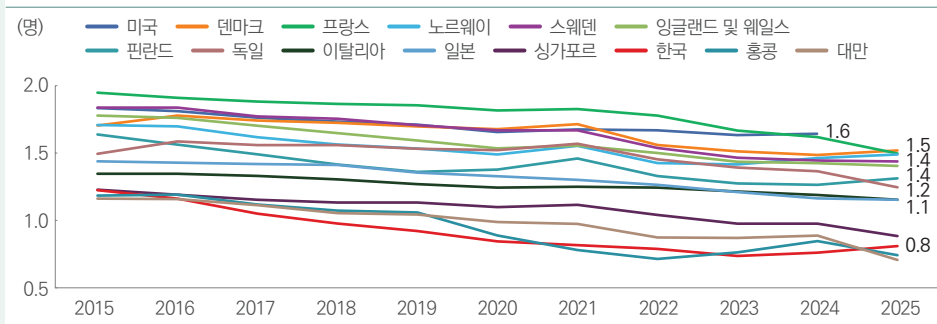
2) OECD 기준에 따르면 2.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은 저출산, 1.3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으로 분류

자료: 각국 통계청

▶ 합계출산율 하락은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추세

- 미국과 유럽 주요국도 최근 10년간 대체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여, 출산율 하락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5년 1.84명보다 0.2명 이상 감소
 - 이탈리아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1.14명으로 G7 국가 가운데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말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았으나, 2025년 1.4명 내외의 출산율을 기록
- 다만, 아시아 국가-지역은 다른 주요국보다 출산율 수준이 더 낮고 일부는 이미 1명 미만의 초저출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세계적 저출산 추세 속에서도 특히 낮은 수준을 보임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이



주: 2025년은 잠정치 혹은 확정치가 존재하는 나라만 비교

자료: 각국 통계청

요약

고용 동향(2026.07)



7월 취업자 수는 10.8만명 증가하여 직전 3개월보다 증가폭이 커졌으나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하는 추세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4.0→(6월)6.3→(7월)10.8
-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0.1%p 하락한 가운데 20대 남녀는 각각 1.5%p, 1.6%p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30대 남성 고용률도 1.1%p 하락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7.3만), 예술·스포츠·여가업(+4.8만)이 고용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6.8만), 건설업(-5.7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4.4만) 등에서는 감소

7월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청년 실업률은 6.8%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청년 확장실업률은 16.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6월 채용은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중심으로 증가, 빈일자리율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11.1→(5월)9.3→(6월)16.4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4월)0.01→(5월)0.02→(6월)0.01

5월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증가한 가운데 1.7% 상승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6.3월)2.3→(4월)1.5→(5월)1.7

주요 용어

고용량 관련

- **15세 이상 인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단, 군인, 사회복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자, 학생, 취업준비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등)
- **경제활동인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로서, 취업자 또는 실업자를 말함
- **실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이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였거나, 일시휴직 등의 이유로 쉬었지만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경우 포함)와 무급가족종사자
- **임금근로자**: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 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 **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확장실업률** = $\frac{\text{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text{실업자}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text{경제활동인구} + \text{잠재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취업가능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와 잠재구직자(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
- **구인배수**: 신규 구직 건수 대비 신규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

노동력 수급 관련

- **입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채용·재배치 등에 의해 신규 영입되는 근로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입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text{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이직률**: 현직에 있는 근로자 대비 퇴사·이직·재배치 등에 의해 현직을 이탈하는 근로자(이직자) 비율

$$= \frac{\text{조사기준월 이직자}}{(\text{조사기준월 근로자} + \text{조사기준전월 근로자})/2} \times 100 (\%)$$
- **빈일자리율**: 전체 일자리 중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빈일자리) 비중으로, 구인난의 한 지표

$$= \frac{\text{빈일자리}}{\text{근로자현원} + \text{빈일자리}} \times 100 (\%)$$



01 고용량

가. 고용총량

7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8만 명, 취업자 수는 10.8만 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인구는 2,991.2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8만 명(0.5%) 증가
 - 경제활동인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1.4→(6월)7.3→(7월)15.8
-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4→(6월)-0.2→(7월)0.0
- 취업자 수는 2,913.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8만명(0.4%)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4.0→(6월)6.3→(7월)10.8
-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5→(6월)-0.2→(7월)-0.1
-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1→(6월)0.0→(7월)0.2
- 청년(15~29세) 실업률은 6.8%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청년 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6→(6월)0.9→(7월)1.3

그림 1 |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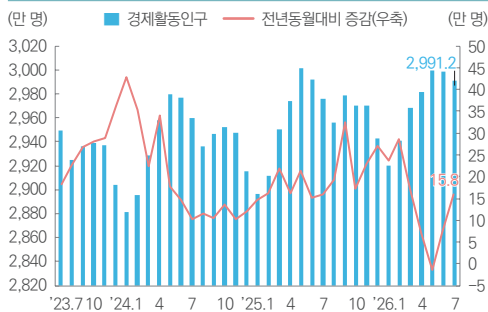


그림 2 |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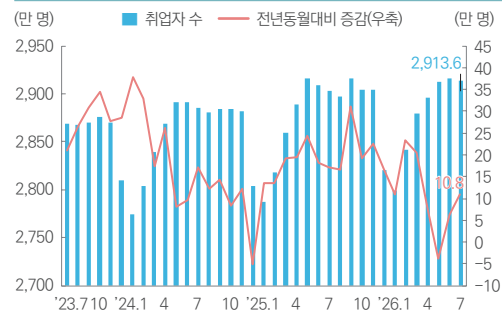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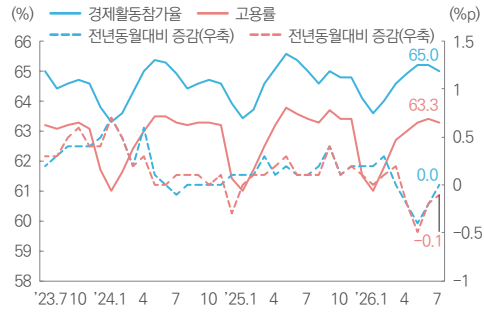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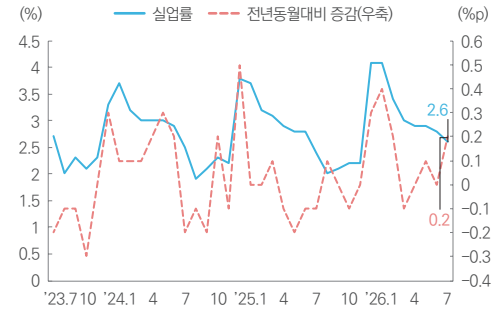


그림 3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4 |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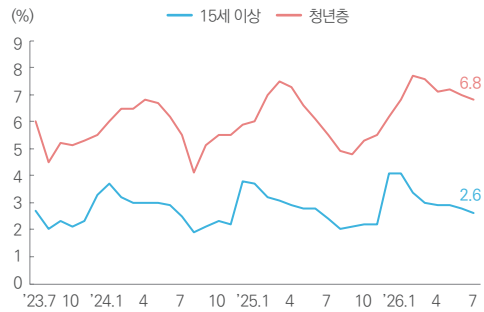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고용보조지표

➡ 7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 인구는 하락, 청년층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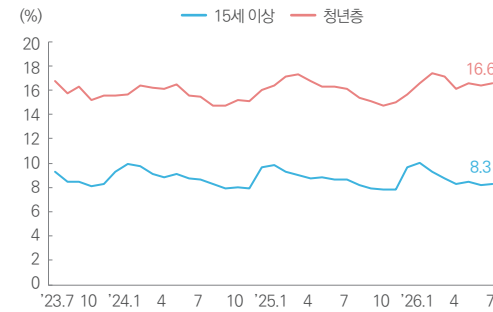
- 15세 이상 확장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16.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15세 이상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3→(6월)-0.4→(7월)-0.3
 -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0.3→(6월)0.1→(7월)0.5

그림 5 | 15세 이상 및 청년층 실업률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 15세 이상 및 청년층 확장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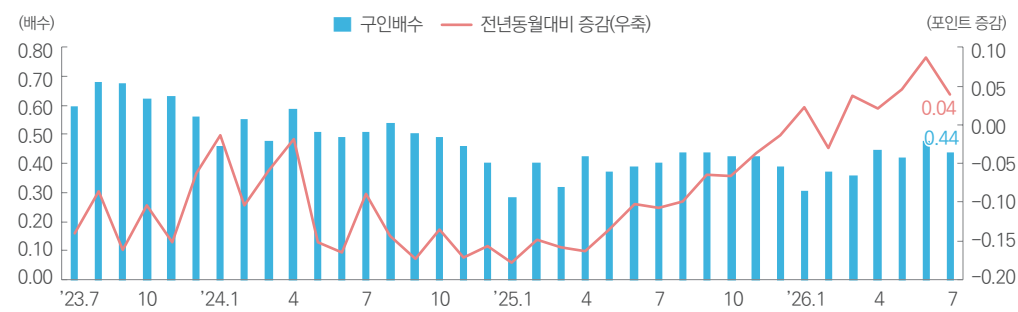


주: 청년층은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연령을 의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7월 워크넷 구인배수는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

- 구인배수는 0.44(구직자 100명당 44개의 일자리)로 전년동월대비 0.04 포인트 상승
 - 구인배수(전년동월대비, 포인트 증감): ('26.5월)0.05→(6월)0.09→(7월)0.04
- 구인배수는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매월 하락하였으나 2026년 3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그림 7 | 구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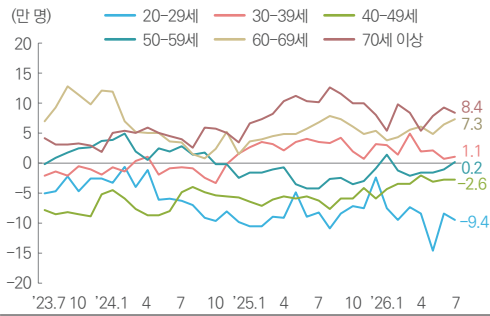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성·연령별 취업자

➡ 7월 취업자 수는 남녀 모두 20대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30대 및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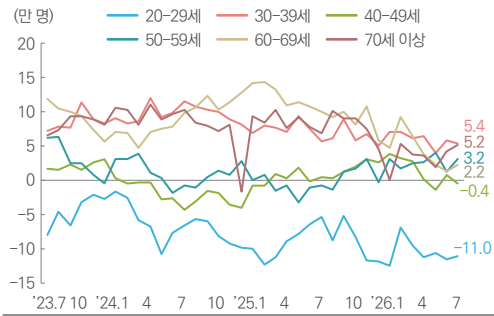
- 남성은 20대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증가세 유지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14.6→(6월)-8.4→(7월)-9.4
 - 30대: ('26.5월)2.2→(6월)0.7→(7월)1.1
 - 40대: ('26.5월)-3.0→(6월)-2.7→(7월)-2.6
 - 50대: ('26.5월)-1.6→(6월)-1.0→(7월)0.2
 - 60대: ('26.5월)4.9→(6월)6.4→(7월)7.3
 - 70세 이상: ('26.5월)8.0→(6월)9.3→(7월)8.4
- 여성은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세 이어지는 가운데 40대 제외한 연령대는 증가세 지속
 - 2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10.5→(6월)-11.5→(7월)-11.0
 - 30대: ('26.5월)4.0→(6월)5.8→(7월)5.4
 - 40대: ('26.5월)-1.4→(6월)0.9→(7월)-0.4
 - 50대: ('26.5월)4.1→(6월)1.3→(7월)3.2
 - 60대: ('26.5월)2.3→(6월)1.3→(7월)2.2
 - 70세 이상: ('26.5월)2.0→(6월)4.2→(7월)5.2

그림 8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 |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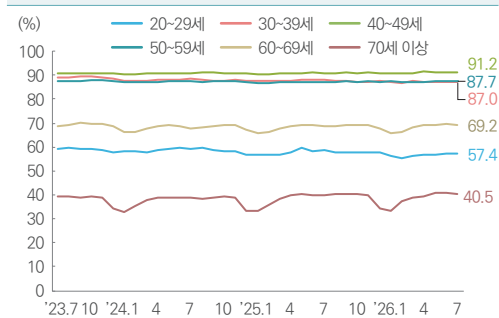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7월 고용률은 20대 여성과 20~30대 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성은 30대~50대 중심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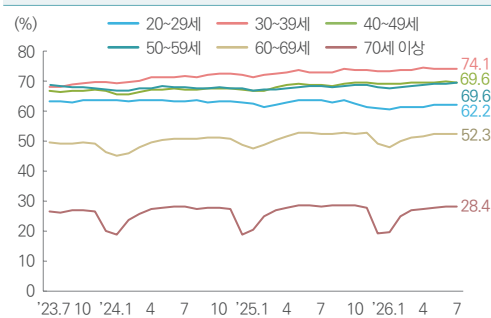
- 남성 고용률은 20대~30대가 각각 1.5%p, 1.1%p 하락, 40대 이상은 상승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3.2→(6월)-1.1→(7월)-1.5
 - 30대: ('26.5월)-0.8→(6월)-1.2→(7월)-1.1
 - 40대: ('26.5월)0.3→(6월)0.3→(7월)0.3
 - 50대: ('26.5월)0.4→(6월)0.6→(7월)0.8
 - 60대: ('26.5월)0.1→(6월)0.4→(7월)0.7
 - 70세 이상: ('26.5월)0.2→(6월)0.8→(7월)0.5
- 여성 고용률은 20대가 1.6%p 하락한 반면 30대~50대는 상승세 지속
 - 20대 고용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5월)-1.3→(6월)-1.7→(7월)-1.6
 - 30대: ('26.5월)0.6→(6월)1.2→(7월)1.1
 - 40대: ('26.5월)0.7→(6월)1.3→(7월)1.0
 - 50대: ('26.5월)1.4→(6월)0.9→(7월)1.3
 - 60대: ('26.5월)-0.2→(6월)-0.5→(7월)-0.3
 - 70세 이상: ('26.5월)-0.8→(6월)-0.3→(7월)0.0

그림 10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남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1 |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여성)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라. 산업별 취업자

7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17.3만 명), 예술·스포츠·여가업(+4.8만 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에서는 지속 감소

- 보건·사회복지업은 17.3만 명 증가하여 고용 성장을 주도
 -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21.2→(6월)21.4→(7월)17.3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은 4.4만 명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8.9→(6월)-6.0→(7월)-4.4
- 제조업 취업자 수는 6.8만 명 감소하며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14.0→(6월)-9.7→(7월)-6.8
- 건설업 취업자 수는 5.7만 명 감소하여 감소세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4.3→(6월)-6.7→(7월)-5.7
- 운수·창고업은 0.5만 명 감소하여 1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3.6→(6월)4.8→(7월)-0.5
-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8만 명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예술·스포츠·여가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5월)4.4→(6월)5.5→(7월)4.8

표 1 |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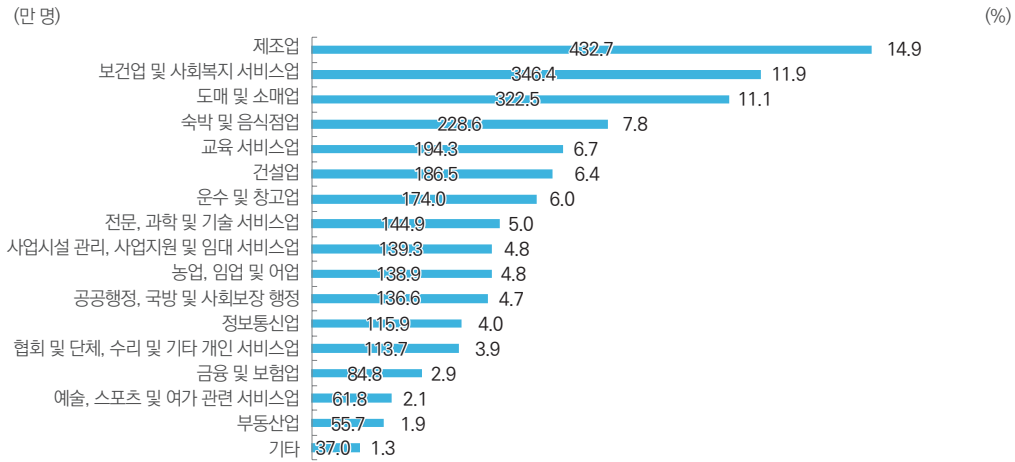
산업별	'25.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농업, 임업 및 어업	-13.8	-14.6	-12.4	-13.2	-11.7	-10.7	-9.0	-5.8	-9.2	-12.1	-9.5	-8.0
제조업	-6.1	-6.1	-5.1	-4.1	-6.3	-2.3	-1.6	-4.2	-5.5	-14.0	-9.7	-6.8
건설업	-13.2	-8.4	-12.3	-13.1	-6.3	-2.0	-4.0	-1.6	-0.8	-4.3	-6.7	-5.7
도매 및 소매업	0.0	2.8	4.6	1.1	4.4	2.3	2.2	-1.8	-5.2	-3.6	-4.4	-0.5
운수 및 창고업	0.5	1.0	1.4	4.1	7.2	7.1	8.1	7.5	1.8	3.6	4.8	-0.5
숙박 및 음식점업	0.0	2.6	2.2	-2.2	-2.2	-1.6	-2.7	-0.2	-2.9	2.0	1.0	0.2
정보통신업	-1.6	-1.3	-0.4	2.2	0.7	-2.1	-4.2	0.3	1.8	2.6	4.7	2.2
금융 및 보험업	3.2	3.0	3.4	4.9	2.8	1.8	2.2	0.9	0.2	0.0	1.5	3.4
부동산업	4.0	3.0	1.1	0.2	1.1	3.0	3.5	3.4	4.9	2.8	2.4	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	2.9	-0.2	0.2	-5.6	-9.8	-10.5	-6.1	-11.5	-8.9	-6.0	-4.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	1.9	1.4	6.3	4.9	4.2	4.2	2.1	3.3	1.6	2.0	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2	0.6	0.2	-0.3	-0.4	-4.1	-3.0	-7.7	-1.7	0.2	0.2	4.6
교육 서비스업	4.8	5.6	1.2	0.7	2.2	3.6	5.8	1.7	-0.4	-0.6	-1.9	-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4	30.4	28.0	28.1	22.0	18.5	28.8	29.4	26.1	21.2	21.4	1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	7.5	7.0	6.1	5.5	4.5	7.0	4.4	5.4	4.4	5.5	4.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	-0.1	-1.3	0.6	0.5	1.1	-1.4	0.1	0.5	0.0	-1.3	-1.4
기타	1.7	0.5	0.5	0.7	-2.0	-2.6	-2.1	-2.0	0.6	1.4	2.3	3.2
계 (전체 취업자 수 증감)	16.6	31.2	19.3	22.5	16.8	10.8	23.4	20.6	7.4	-4.0	6.3	10.8

주: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자료: 국가데이터터,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 산업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주: 1. 2026년 7월 기준

2. '기타'는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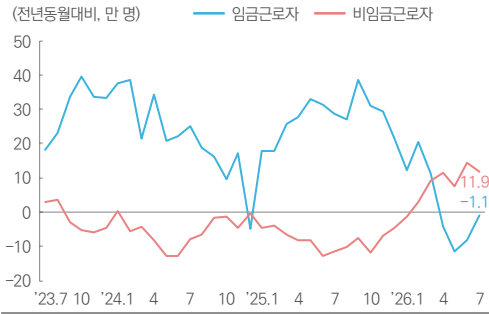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 고용형태별 취업자

7월 임금근로자는 1.1만명 감소,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11.9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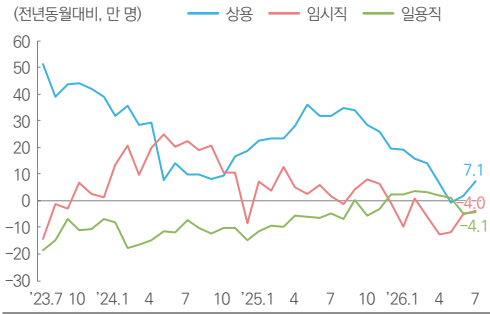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명 감소로 4개월째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축소
 - 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11.5→(6월)-8.1→(7월)-1.1
- 임금근로자 유형별로는 상용직이 7.1만명 증가,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4.0만명, 4.1만명 감소
 - 상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0.7→(6월)1.6→(7월)7.1
 - 임시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12.1→(6월)-5.1→(7월)-4.0
 - 일용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1.4→(6월)-4.5→(7월)-4.1
- 비임금근로자는 11.9만명 증가하여 6개월 연속 증가
 - 비임금근로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7.5→(6월)14.4→(7월)11.9

그림 13 |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4 | 임금근로자 유형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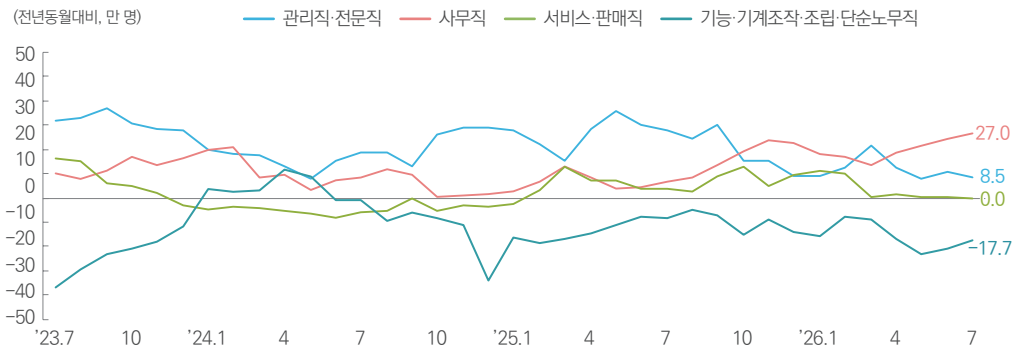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바. 직업별 취업자

7월 관리직·전문직, 사무직, 취업자 수는 증가, 서비스·판매직 취업자 수는 보합,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감소

- 관리직·전문직은 722.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5만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7.9→(6월)10.6→(7월)8.5
- 사무직은 540.0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0만명 증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21.3→(6월)24.6→(7월)27.0
- 서비스·판매직은 612.5만명으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0.5→(6월)0.4→(7월)0.0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은 90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7만명 감소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5월)-23.0→(6월)-21.0→(7월)-17.7

그림 15 | 직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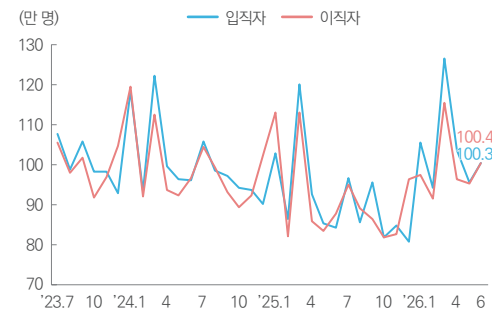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 입직과 이직

6월 입·이직자 수와 입·이직률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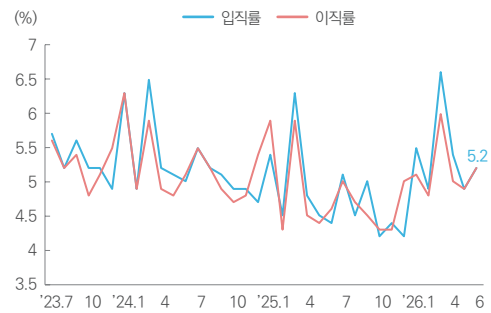
- 입직자는 100.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2만 명 증가, 입직률은 5.2%로 0.8%p 상승
 -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4월)10.9→(5월)10.2→(6월)16.2
 - 입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4월)0.6→(5월)0.4→(6월)0.8
- 이직자는 100.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8만 명 증가, 이직률은 5.2%로 0.6%p 상승
 - 이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 명): ('26.4월)10.7→(5월)12.0→(6월)12.8
 - 이직률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4월)0.5→(5월)0.5→(6월)0.6

그림 16 | 입·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17 | 입·이직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나.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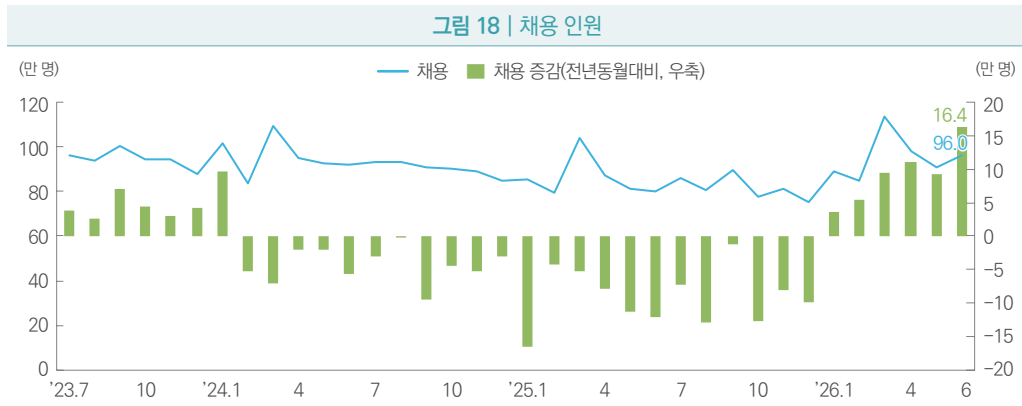
6월 전년동월대비 채용은 증가하고 기타 입직자 수는 소폭 감소

- 채용 인원은 96.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4만명 증가
 - 채용 인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11.1→(5월)9.3→(6월)16.4
- 기타 입직자^[7]는 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만명 감소
 - 기타 입직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2→(5월)0.9→(6월)-0.2

[7] 기타 입직은 본·지사간 전입, 복직 등에 의한 입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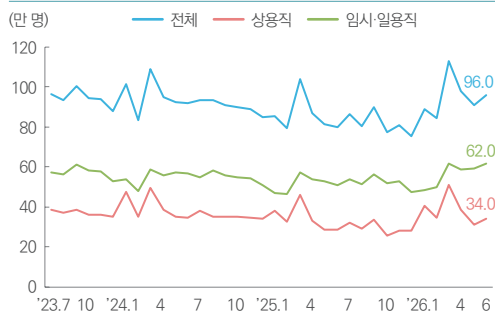
➡ 상용직·임시·일용직과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전년동월대비 채용 증가

- (고용형태별) 상용직 채용은 34.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만명 증가, 임시·일용직 채용은 62.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만명 증가
 - 상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5.8→(5월)2.7→(6월)5.2
 - 임시·일용직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5.3→(5월)6.7→(6월)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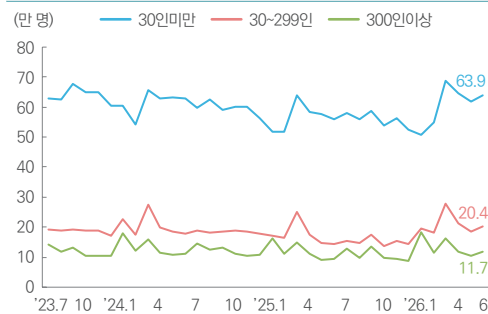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인원은 63.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만 명 증가, 30~299인 사업체는 20.4만 명으로 6.1만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11.7만 명으로 2.3만명 증가
 - 30인 미만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6.3→(5월)4.1→(6월)8.0
 - 30~299인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3.9→(5월)3.9→(6월)6.1
 -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9→(5월)1.3→(6월)2.3
- (업종별) 건설업(+5.8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2.1만명)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75명), 광업(-40명)은 감소폭이 제한적
 - 건설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3.4→(5월)3.4→(6월)5.8
 - 숙박 및 음식점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3→(5월)0.4→(6월)2.1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6.4월)-444→(5월)-411→(6월)-175
 - 광업 채용 증감(전년동월대비, 명): ('26.4월)7→(5월)-101→(6월)-40

그림 19 | 고용형태별 채용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0 | 사업체 규모별 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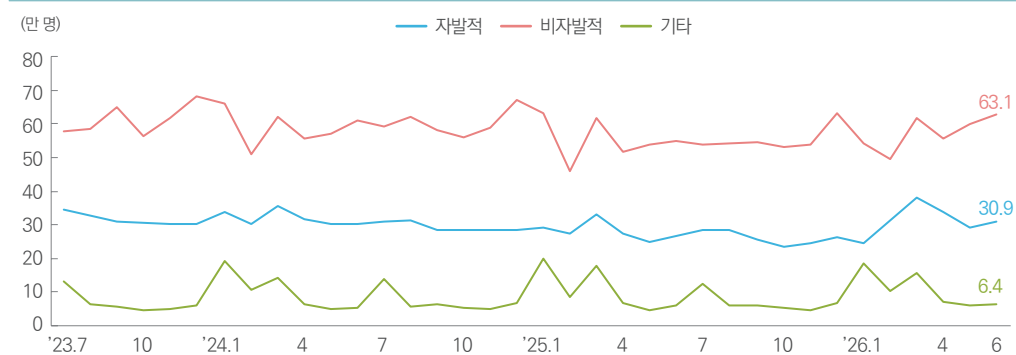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다. 비자발적 이직

6월 자발적·비자발적·기타 이직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

- 자발적 이직은 3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명 증가, 비자발적 이직은 63.1만명으로 8.1만명 증가, 기타 이직은 6.4만명으로 0.3만명 증가^[8]
 - 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6.5→(5월)4.4→(6월)4.4
 -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3.9→(5월)6.3→(6월)8.1
 - 기타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3→(5월)1.3→(6월)0.3

그림 21 | 사유별 이직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8] 비자발적 이직은 고용계약 종료 또는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에 따른 면직 등을 의미. 기타 이직은 본 지사간 전출, 정년퇴직·사망, 병가·육아휴직, 무급휴직 등에 의한 이직을 의미

➡ 비자발적 이직은 임시·일용직 및 30~299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고용형태별) 상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은 6.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만명 감소, 임시·일용직은 56.6만명으로 8.2만명 증가
 - 상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6→(5월)1.2→(6월)-0.1
 -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3.3→(5월)5.1→(6월)8.2
- (규모별)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은 4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명 증가, 30~299인 사업체는 11.5만명으로 3.5만명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7.1만명으로 1.2만명 증가
 - 30인 미만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5→(5월)1.8→(6월)3.4
 - 30~299인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2.5→(5월)3.7→(6월)3.5
 - 300인 이상 사업체 비자발적 이직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6.4월)0.9→(5월)0.8→(6월)1.2

그림 22 |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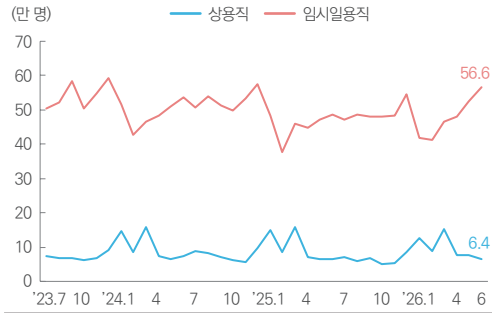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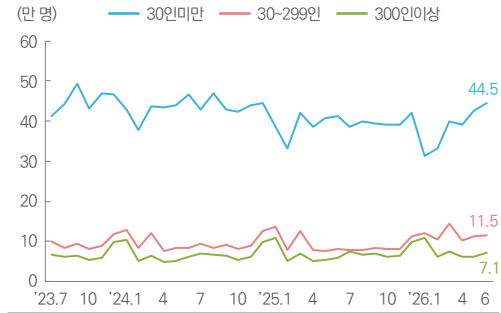


그림 23 | 사업체 규모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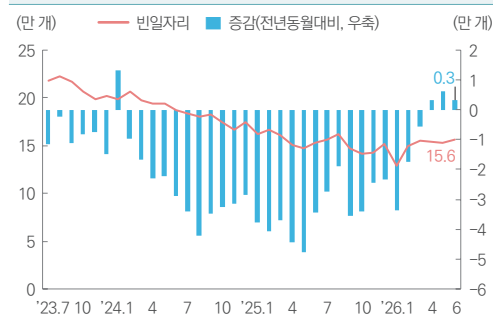


라. 빈일자리

🔄 6월 빈일자리 수와 빈일자리율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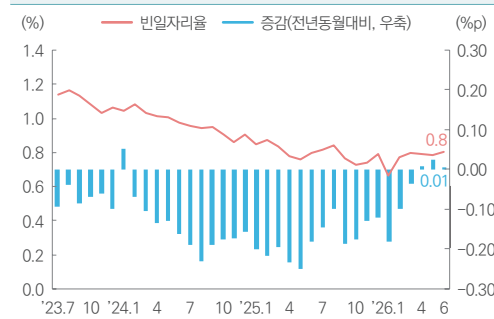
- 빈일자리 수는 15.6만 개로 전년동월대비 0.3만개 증가, 빈일자리율은 0.8%로 전년동월대비 0.01%p 상승
 - 빈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개): ('26.4월)0.3→(5월)0.6→(6월)0.3
 - 빈일자리율 증감(전년동월대비, %p): ('26.4월)0.01→(5월)0.02→(6월)0.01
- 빈일자리 수 및 빈일자리율은 전년동월대비 하락을 지속하다 4월부터 상승 전환
- (규모별) 30인 미만, 3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빈일자리율은 각각 0.9%, 1.0%, 0.3%

그림 24 | 빈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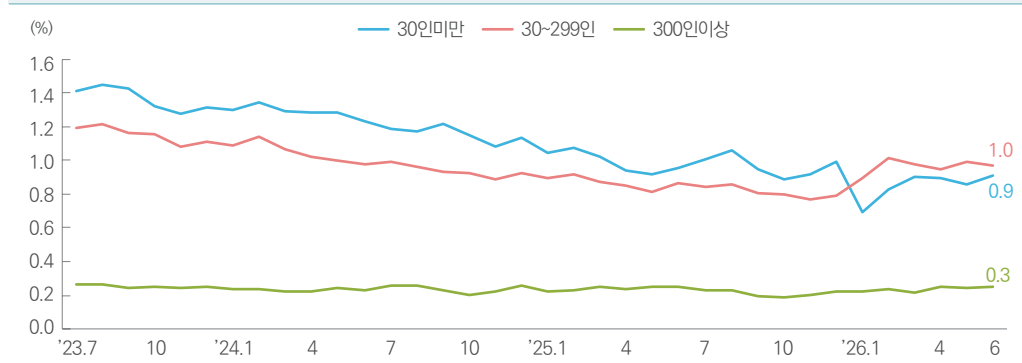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5 |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그림 26 | 사업체 규모별 빈일자리율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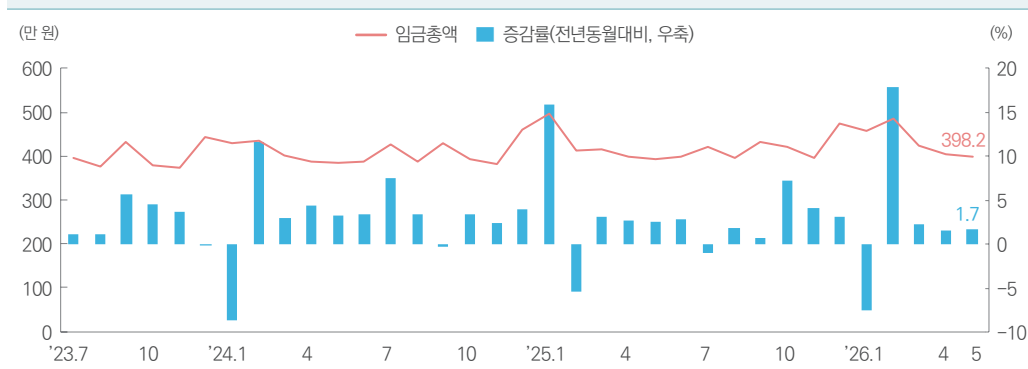
03 임금 및 가구 소득

가. 임금

➡ 5월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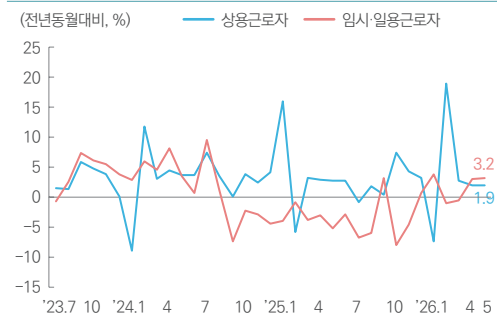
-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 임금총액은 398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2.3→(4월)1.5→(5월)1.7
- 상용직 근로자 임금은 425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임시·일용직은 179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상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2.8→(4월)1.9→(5월)1.9
 - 임시·일용직 임금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0.5→(4월)3.1→(5월)3.2
- 상용직 임금 내역별로는 정액급여가 전년동월대비 7.6만원(2.1%) 증가하고, 초과급여는 1.7만원(6.3%) 증가한 반면, 특별급여는 1.4만원(5.0%) 감소
 - 정액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3월)7.7→(4월)8.2→(5월)7.6
 - 초과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3월)2.2→(4월)1.2→(5월)1.7
 - 특별급여 증감(전년동월대비, 만원): ('26.3월)2.2→(4월)-1.5→(5월)-1.4

그림 27 |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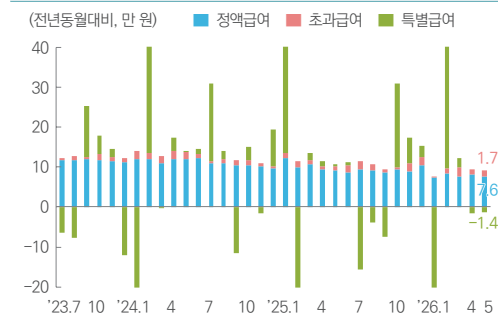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8 | 고용형태별 임금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29 |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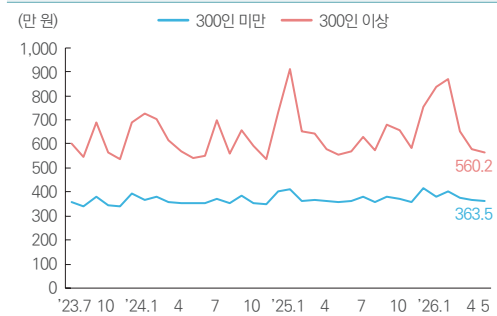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 300인 미만 사업체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300인 이상은 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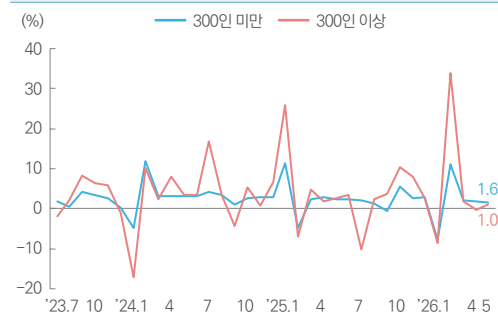
-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은 364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560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2.0→(4월)1.8→(5월)1.6
-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총액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6.3월)1.7→(4월)-0.3→(5월)1.0

그림 30 | 사업체 규모별 임금총액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그림 31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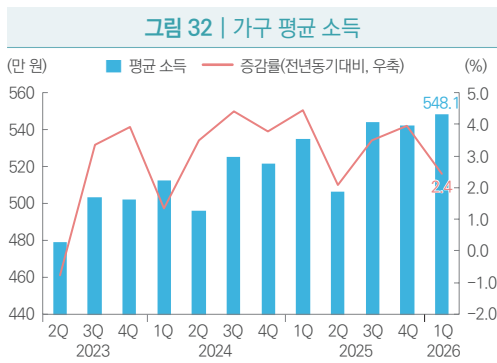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실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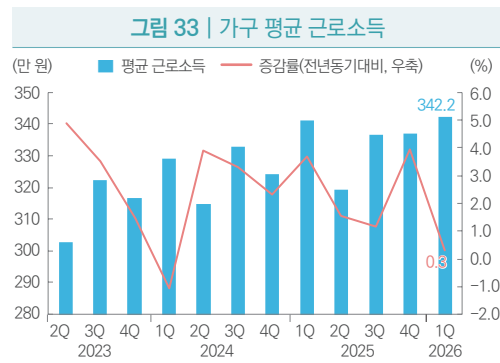
나. 가구 소득

➡ 1/4분기 가구 명목 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명목 평균 근로소득은 0.3% 증가

- 전체 가구의 명목 월평균 소득은 54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 (사업·재산·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월평균 근로소득은 34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 증가
 - 가구 평균 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3/4분기)3.5→(4/4분기)4.0→('26.1/4분기)2.4
 - 가구 평균 근로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3/4분기)1.1→(4/4분기)3.9→('26.1/4분기)0.3
 - 가구 평균 사업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3/4분기)0.2→(4/4분기)3.0→('26.1/4분기)2.6
 - 가구 평균 재산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3/4분기)-0.8→(4/4분기)-8.9→('26.1/4분기)9.1
 - 가구 평균 이전소득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25.3/4분기)17.7→(4/4분기)7.9→('26.1/4분기)9.7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요약

‘SDG6 모두를 위한 물’ 분야는 상·하수도 보급과 수질이 개선되었으나, 물 이용 효율성과 지역 격차는 과제

- 2024년 상수도 보급률은 98.0%, 하수도 보급률은 95.6%이며, 수질 목표기준 달성률은 하천 88.7%, 호소 59.2%
- 2023년 물 이용 효율성은 63.9달러/㎥로 OECD 평균(140.4달러/㎥)을 크게 하회

‘SDG7 모두를 위한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효율과 전력생산 탄소집약도가 장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최근 개선세가 정체

- 2024년 에너지원단위(TOE/1,000USD): (한국)0.099, (OECD 회원국 집계치)0.069
- 2024년 전력생산 탄소집약도는 1.01MtCO₂/TWh로 2015년 대비 14.2% 감소

‘SDG9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분야는 제조업과 연구개발 경쟁력이 높은 반면 제조업 고용 비율은 하락

- 2025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7.4%, 제조업 고용 비율은 15.2%
- 2024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5.1%로 처음 5%를 상회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분야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공공녹지는 지역 격차가 큼

- 2024년 대중교통 이용자의 85.4%가 15분 미만에 접근 가능하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44.4%
-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5.2㎍/㎥에서 2024년 15.6㎍/㎥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분야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국제적으로 하위권이며, 폐기물 재활용 성과도 유형별 차이가 큼

- 2024년 1인당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53.5W로 2015년 대비 4.7배 증가했으나, 2023년 OECD 38개국 중 33위
- 2024년 재활용 처리 비율은 사업장배출시설계 84.3%, 지정폐기물 64.5%, 생활폐기물 59.8% 수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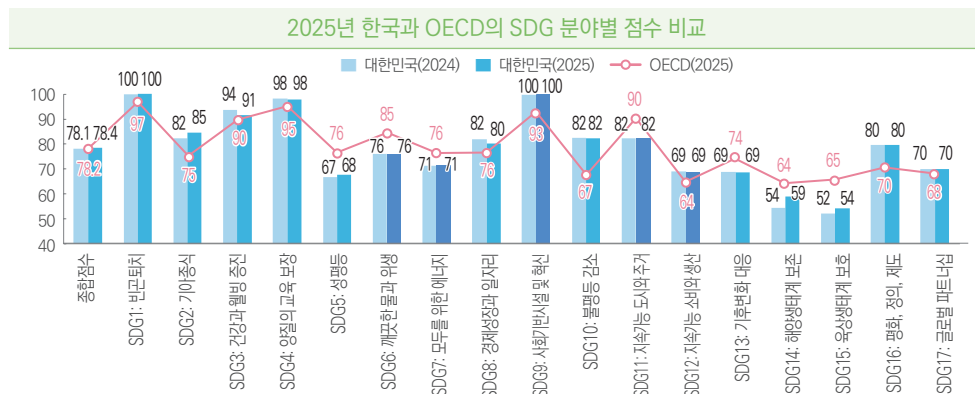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미래 세대의 평화,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17개 목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으므로, 'Ⅲ.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연간 지표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 (구성) 15개 목표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관련성이 있는 주제를 함께 묶어 지속가능 성장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수록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분석 예정 SDG 목표		
카테고리	SDG 종류	SDG 영역
보건·건강	1	빈곤퇴치
	2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
	3	건강과 웰빙 증진
자연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호
생활	6	모두를 위한 물
	7	모두를 위한 에너지
	9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분야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적자원·제도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성평등
	16	평화·정의·포용적인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제7호에서는 생활과 관련된 '물(SDG6)', '에너지(SDG7)', '산업화 및 혁신(SDG9)', '도시와 주거(SDG11)', '소비와 생산(SDG12)' 관련 분야의 동향 지표를 수록

- OECD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 물(SDG6), 에너지(SDG7), 도시와 주거(SDG11) 분야의 성취도는 비교열위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6 (DOI 10.82163/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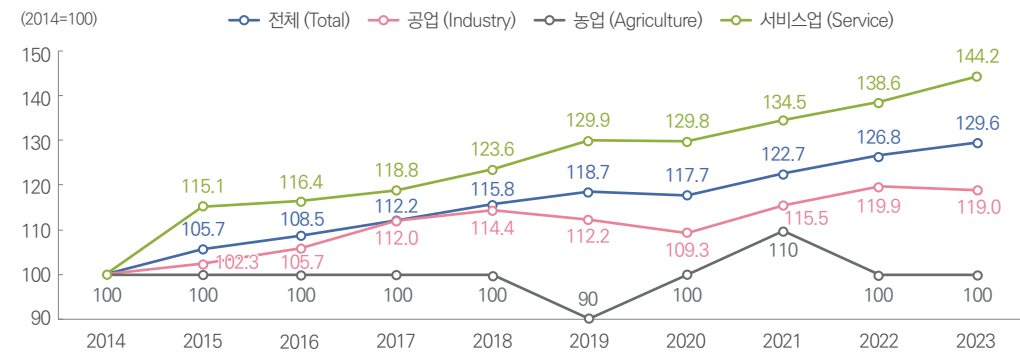
01 모두를 위한 물

가. 물 이용 효율성

➡ 2023년 물 이용 효율성^[9]은 63.9달러/㎥로, OECD 평균을 하회

- 2023년 물 이용 효율성은 63.9달러/㎥로 전년대비 1.4달러/㎥ 상승하였으나, 농업 부문은 2014년 수준에서 개선되지 않고 정체
 - 전체 물 이용 효율성(달러/㎥): ('21년)60.5→('22년)62.5→('23년)63.9
 -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달러/㎥): ('21년)1.1→('22년)1.0→('23년)1.0

그림 1 | 산업별 물 이용 효율성 변화 (2014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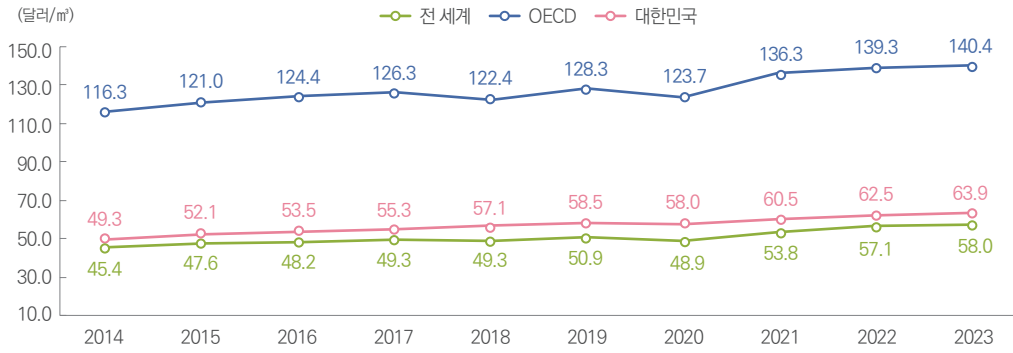


자료: FAO, <https://www.fao.org/faostat/en/#data/SDGB>

- 2023년 우리나라의 물 이용 효율성은 세계 평균(58.0달러/㎥)보다 높았으나, OECD 평균(140.4달러/㎥)보다 크게 낮아 38개국 중 21위에 머무름

[9] 물 1㎥를 사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환경 통합지표(SDG 6.4.1). 여기서 물 사용은 물이 서비스되는 특정 형태의 활동을 의미하며, 관개농업용수, 주요 산업 부문, 서비스 용수 등의 효율성을 포함함.

그림 2 | 물 이용 효율성 전 세계 및 OECD 국가 비교 (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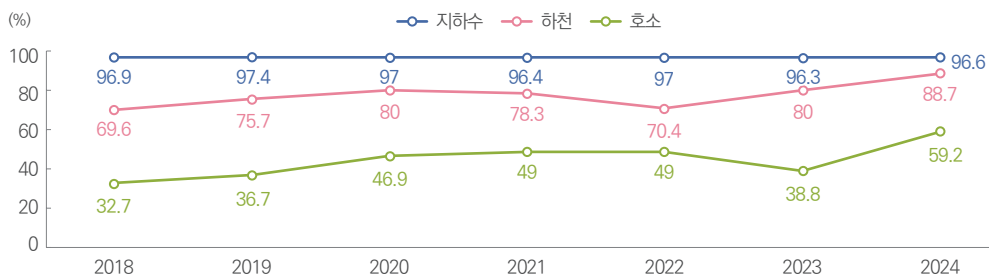
자료: UN,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database>

나.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10]

➡ 2024년 전체 하천의 88.7%, 전체 호소^[11]의 59.2%가 수질 목표기준을 달성하였으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합률은 96.6%로 나타남

- 2024년 하천의 달성도는 조사가 시작된 2018년 69.6%에서 19.1%p 상승하였으며, 호소의 달성도는 2018년 대비 26.5%p 상승하여 59.2%로 개선
 - 하천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18년)69.6→('21년)78.3→('24년)88.7
 - 호소 수질 목표기준 달성도(%): ('18년)32.7→('21년)49.0→('24년)59.2
- 2024년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률은 96.6%이나, 강원(91.6%), 서울(93.3%), 경기(94.6%)의 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률(%): ('18년)96.9→('21년)96.4→('24년)96.6

그림 3 | 수질 목표기준 달성률 (2018~202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지하수조사연보」

[10] 평가대상 하천 및 호소 중권역 가운데 권역별로 설정된 생활환경 수질 목표기준을 충족한 권역의 비율로, 하천은 BOD, 호소는 TOC를 기준으로 산정함.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률은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중 용도별 법정 수질기준을 충족한 시설의 비율임. 각 지표는 평가대상과 기준이 달라 수치의 직접 비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SDG 6.3.2 관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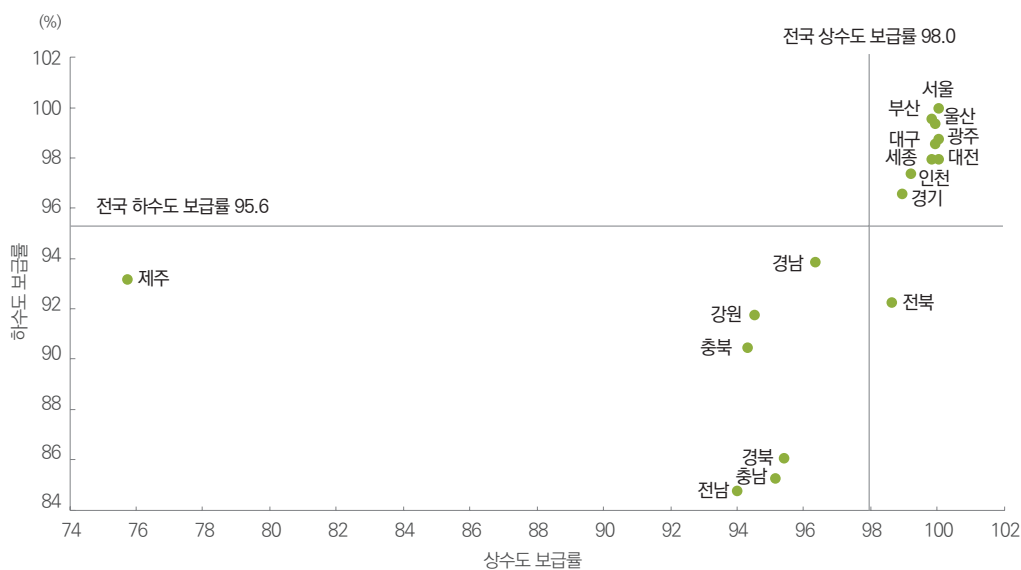
[11] 호수, 늪, 못 등 한 곳에 고여 있는 물(정체수계)

다. 상·하수도 보급률

➡ 2024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12]은 98.0%, 하수도 보급률^[13]은 95.6%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

- 2024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0%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90% 이상의 보급률을 보임
 - 전국 상수도 보급률(%): ('22년) 97.8→('23년)97.9→('24년)98.0
 - 2024년 주요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서울, 광주, 대전)100, (대구, 울산)99.9, (부산, 세종)99.8 / (전남)94, (충북)94.3, (강원)94.5 / (제주)75.7^[14]
- 2024년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5.6%로, 하수도 보급률이 80%대인 지역이 있어 격차가 나타남
 - 전국 하수도 보급률(%): ('22년) 95.1→('23년)95.4→('24년)95.6
 - 2024년 주요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서울)100, (부산)99.6, (울산)99.4 / (전남)84.8, (충남)85.3, (경북)86.1

그림 4 | 2024년 시도별 상·하수도 보급률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상·하수도 통계」

[12]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임.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들 시설까지 포함하여 실제 급수서비스 수혜 정도를 나타내는 '급수보급률'과 구별됨. 지난 제3호에서는 지역 주민의 실제 서비스 수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급수보급률'을 다루었으나, 이번 제7호에서는 공공 상·하수도 인프라 비교를 위해 지표를 변경함(SDG 6.1.1 관련지표).

[13]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SDG 6.3.1).

[14] 제주는 지하수와 용천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관정 등을 활용한 분산형 급수체계가 발달하여, 일부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에 포함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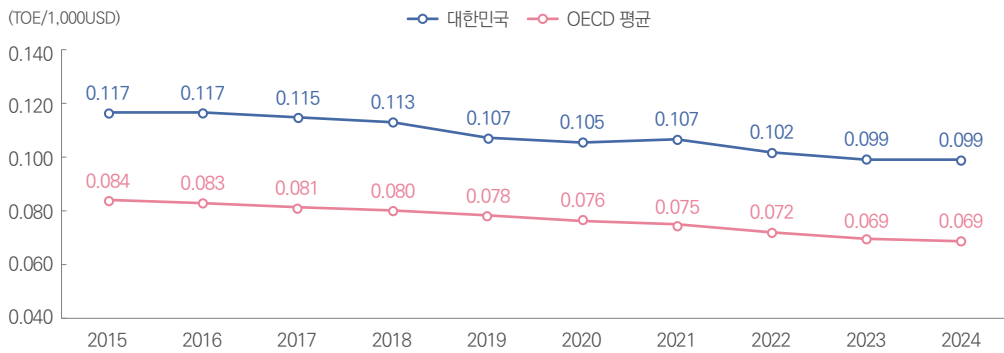
02 모두를 위한 에너지

가. 에너지 집약도^[15]

➡ 2025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0.129TOE/100만원(잠정)으로 개선세가 정체되었고, 2024년 OECD 국제비교에서는 38개국 중 4번째로 높아 여전히 하위권

- 2025년 우리나라 에너지원단위는 0.129TOE/100만원(잠정)으로 최근 개선세 정체
 - 에너지원단위(TOE/100만원): ('22년)0.137→('23년)0.133→('24년)0.133(잠정)→('25년)0.129(잠정)
- 2024년 한국 에너지원단위는 0.099TOE/1,000USD(2021년 PPP 기준)로 OECD 38개국 중 4번째로 높음
 - 한국과 OECD 회원국 집계치의 격차는 2015년 38.3%에서 2024년 44.1%로 확대되어, 한국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속도가 OECD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가별(TOE/1,000USD): (아이슬란드)0.238, (캐나다)0.126, (핀란드)0.100, (한국)0.099, (미국)0.084, (호주)0.079, (OECD 회원국 집계치)0.069, (스위스)0.030, (아일랜드)0.021

그림 5 | 우리나라와 OECD 에너지원단위 (2015~2024)



주: OECD 평균은 World Bank가 제공하는 'OECD members' 가중 집계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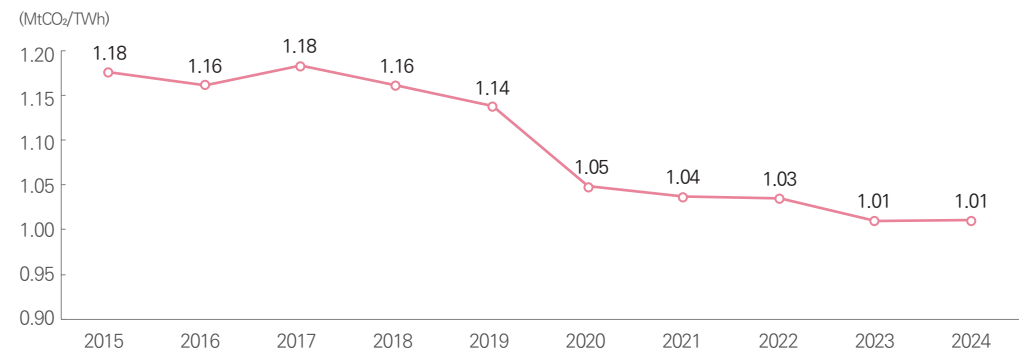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Energy use (kg of oil equivalent) per \$1,000 GDP (constant 2021 PPP)

[15] 에너지원단위는 경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냄. 수치가 낮을수록 같은 경제적 가치를 더 적은 에너지로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의미함. 국내 추이는 TOE/100만원, 국제비교는 TOE/1,000USD(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 단위를 사용함(SDG 7.3.1).

III 지속가능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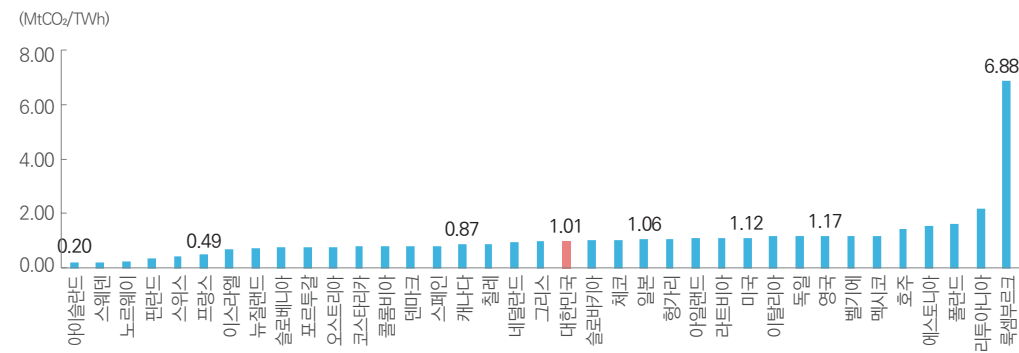
- 2024년 우리나라 전력생산 탄소집약도는 1.01MtCO₂/TWh로 2015년 대비 14.2% 감소
 - 전력생산 탄소집약도(MtCO₂/TWh): ('15년)1.18→('20년)1.05→('22년)1.03→('23년)1.01→('24년)1.01
 - 다만 개선속도는 정체되어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3.6% 감소에 그침
- 2024년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20번째로 낮아 중위권 수준
 - 한국(1.01)은 일본(1.06), 미국(1.12), 영국(1.17)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캐나다(0.87), 프랑스(0.49), 핀란드(0.38) 등보다는 높은 수준

그림 6 | 우리나라 전력생산 탄소집약도 (2015~2024)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6 (DOI 10.82163/225)

그림 7 | 2024년 OECD 국가 전력생산 탄소집약도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6 (DOI 10.82163/225)

[16]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값(MtCO_2/TWh)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발전 부문의 탄소효율이 높음을 의미함.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의 비중과 화력발전 효율을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완함. 글로벌 공식 SDG 지표는 아니며,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가 SDG 7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참고지표임(관련 지표 7.2.1-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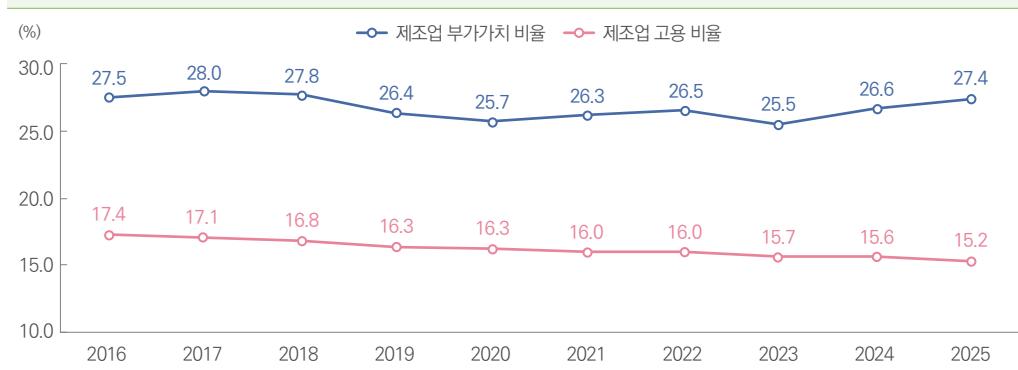
03 사회기반시설·산업화 및 혁신

가.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및 고용 비율

➡ 2025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17]은 27.4%, 제조업 고용비율^[18]은 15.2%

- 2025년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7.4%
 -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22년)26.5→('23년)25.5→('24년)26.6→('25년)27.4
- 2025년 우리나라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비율은 15.2%
 - 제조업 고용 비율(%): ('22년)16.0→('23년)15.7→('24년)15.6→('25년)15.2
- 2024년 주요국(G7, BRICS)과 비교 시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높은 편
 - 국가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대한민국)26.6, (중국)24.8, (독일)18.0, (이탈리아)15.1, (러시아)13.3, (인도)13.1, (브라질)12.1, (프랑스)9.6, (영국)8.0

그림 8 |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율 (2016~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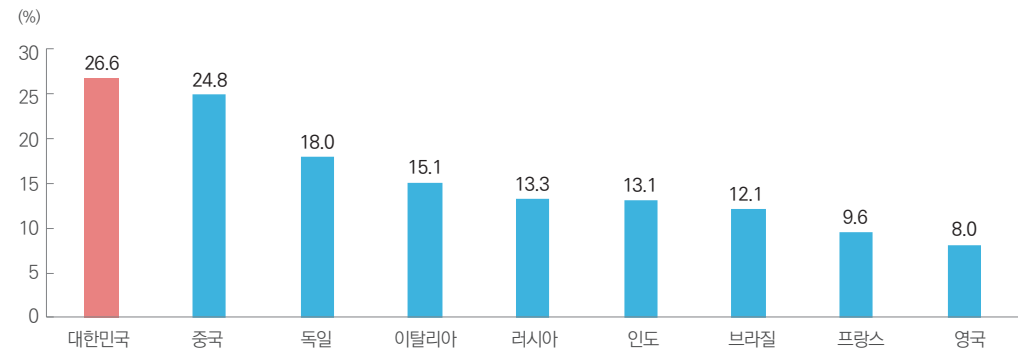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17]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 국가의 전체 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SDG 9.2.1).

[18]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의 비율(SDG 9.2.2).

그림 9 | 2024년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주: 1) 주요국(G7과 BRICs) 중 2024년 통계가 확인되는 국가만 수록하였음

주: 2) 경상가격 기준 제조업 부가가치의 GDP 대비 비율로, 2020년 불변가격을 사용하는 SDG 메타데이터와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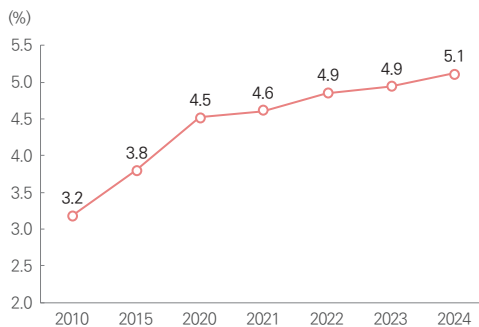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나. 연구개발

➡ 2024년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19]은 5.1%로 최초로 5% 돌파^[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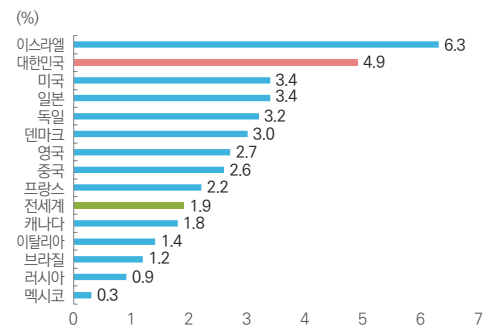
- 2024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5.1%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2년)4.9→('23년)4.9→('24년)5.1
-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높은 편^[21]
 -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이스라엘)6.3, (대한민국)4.9, (미국)3.4, (일본)3.4, (독일)3.2, (전 세계 평균)1.9

그림 10 |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2010~202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11 | 2024년 주요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주: 국내통계와 주요국 비교를 위한 국제통계가 상이

자료: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6 (DOI 10.82163/225)

[19]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이 국내에서 실제로 지출한 국내총연구개발비(GERD)를 당해 연도 GDP로 나눈 비율임. 정부 R&D 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의 실제 연구개발 지출을 모두 포함함(SDG 9.5.1).

[20]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4조 5,000억원 감소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11조 9,722억원 증가하면서 총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음

[21] 국내와 국제통계는 동일한 국내총연구개발비(GERD) 개념을 사용하나, 수행부문 분류, 위탁 수탁 및 해외 수행 연구비 처리, 조사범위, GDP 개정·자료 반영 시점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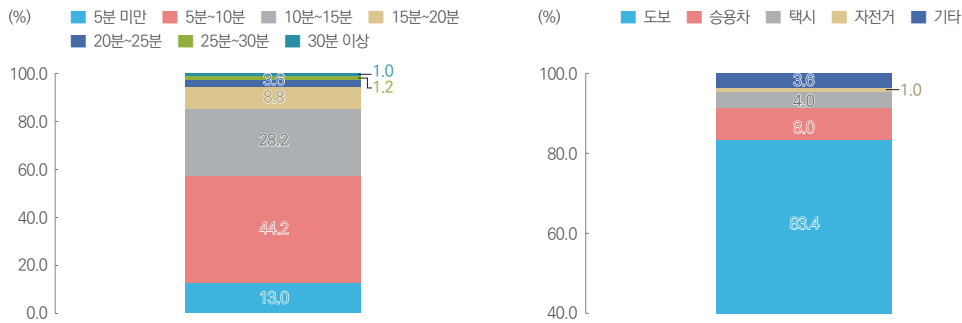
04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가. 대중교통 접근성^[22]

➡ 2024년 대중교통 접근 소요시간·이용행태는 양호하나,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지역별 편차가 큼

- 2024년 15세 이상 대중교통 주 4회 이상 이용자 중 대중교통에 15분 미만 접근 가능 인구는 85.4%
 - 접근시간별 비율(%): (5분 미만)13.0, (5분 이상 15분 미만)72.4, (15분 이상 30분 미만)13.6, (30분 이상)1.0
 - 접근수단별 비율(%): (도보)83.4, (승용차)8.0, (택시)4.0, (자전거)1.0, (기타)3.6

그림 12 | 2024년 대중교통 접근시간 및 접근수단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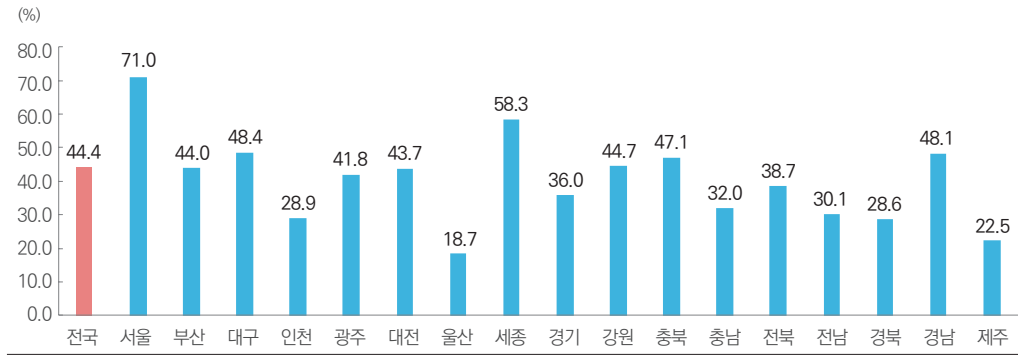


주: 15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 주 4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 2024년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44.4%
 - 주요 지역별 저상버스 도입률(%): (전국)44.4, (서울)71.0, (세종)58.3, (울산)18.7, (제주)22.5

[22]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수단(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까지의 도보 접근 소요시간대별 인구 비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의 보급 비율(저상버스 도입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대중교통 접근성을 측정함(SDG 11.2.1 관련지표). 전체 인구의 거주지와 정류장·역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글로벌 SDG 11.2.1 지표와는 조사대상과 산정방식이 다름.

그림 13 | 2024년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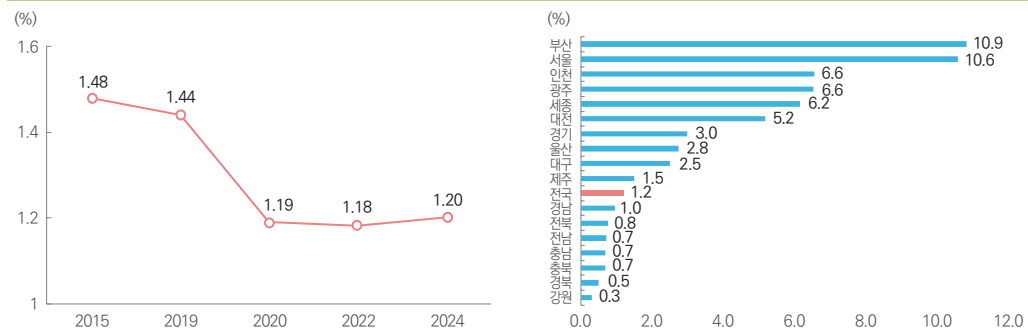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저상버스도입현황」

나. 공공녹지^[23]

➡ 2024년 전국 공공공간 면적 비율은 1.20%,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8㎡

- 전국 공공공간 면적 비율은 2015년 1.48%에서 2019년 1.44%로 완만하게 낮아진 뒤, 2020년 이후 1.20% 수준 유지^[24]
 - 전국 공공공간 면적 비율(%): ('15년)1.48→('19년)1.44→('20년)1.19→('22년)1.18→('24년)1.20
- 지역별로는 특별·광역시와 도 지역 사이에 공공공간 면적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지역별 공공공간 면적 비율(%): (부산)10.9, (서울)10.6, (인천)6.6, (광주)6.6, (강원)0.3, (경북)0.5, (충북)0.7, (충남)0.7

그림 14 | 전국 공공공간 면적비율 추이(2015~2024) 및 2024년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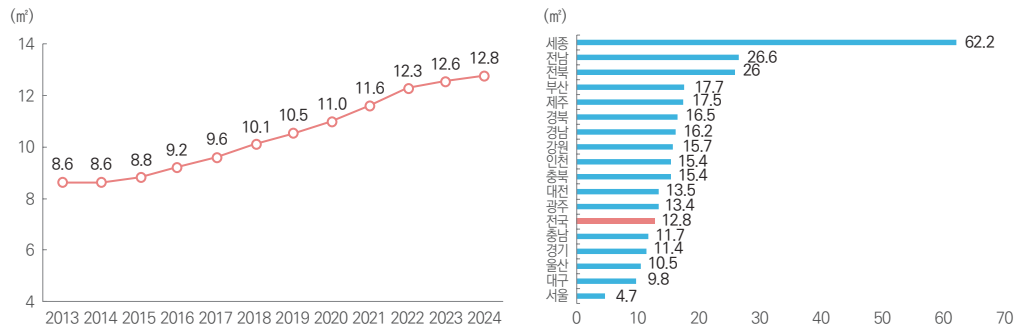
자료: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3] 도시 지역 내 공원 녹지 등 공공 목적으로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과, 도시공원 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도시의 공공녹지 수준을 측정함(SDG 11.7.1 관련지표).

[24] 2020년 비율이 급감하는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도(「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7.1.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되어, 공원 녹지 등 미집행 공간시설이 대거 계획상 면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남
 -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6년)9.2→('18년)10.1→('20년)11.0→('22년)12.3→('24년)12.8
 - 2024년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세종)62.2, (전남)26.6, (부산)17.7, (제주)17.5 등

그림 15|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추이 (2013~2024) 및 2024년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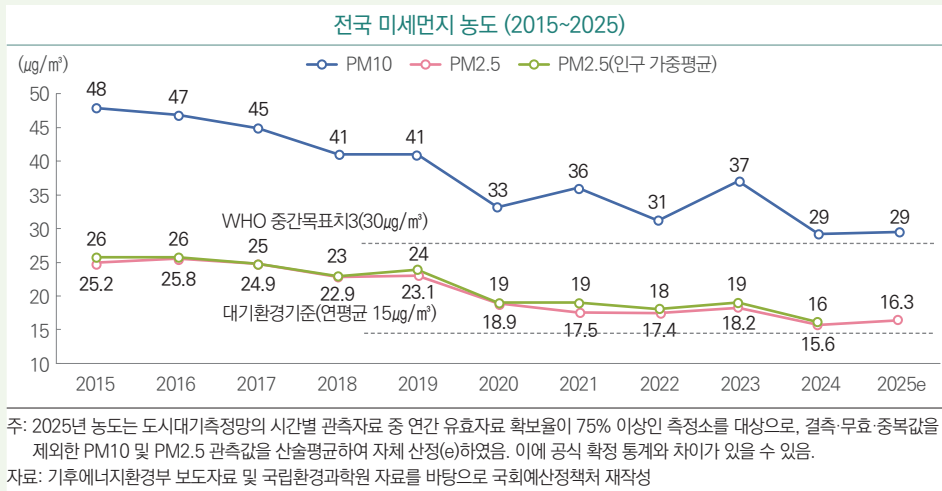


자료: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Box 5]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 개선 추이와 주요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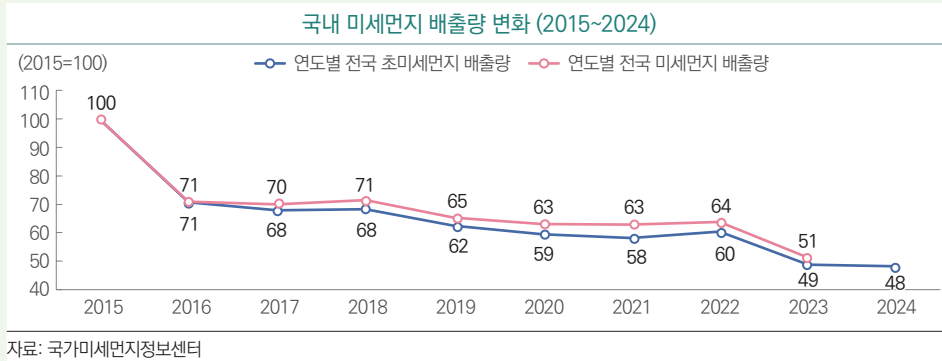
➡ 2024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이후 약 40% 감소하여 뚜렷한 개선세

-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5.2\mu\text{g}/\text{m}^3$ 에서 2024년 $15.6\mu\text{g}/\text{m}^3$ 로 38.1% 감소하여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인구가중평균 기준(SDG 11.6.2)으로도 $26\mu\text{g}/\text{m}^3$ (15년) → $16\mu\text{g}/\text{m}^3$ (24년)로 38.5% 감소
 -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mu\text{g}/\text{m}^3$) 달성 측정소 비율은 18.2%(23년) → 48.3%(24년)로 상승
- 전국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도 2015년 $48\mu\text{g}/\text{m}^3$ 에서 2024년 $29\mu\text{g}/\text{m}^3$ 로 39.6% 감소
 - 2024년 농도는 WHO 중간목표치 3($30\mu\text{g}/\text{m}^3$)을 처음으로 하회



➡ (국내요인) 국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

-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98,806톤에서 2024년 47,677톤(추정)으로 약 51.7% 감소
 -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5년 233,177톤에서 2023년 119,030톤으로 49.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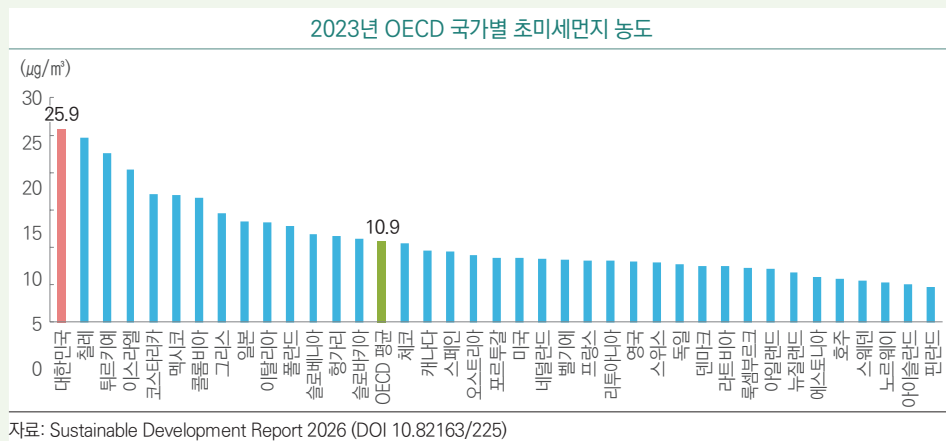


➡ (국외요인) 국외 유입 감소도 국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국가배경측정소인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4\mu\text{g}/\text{m}^3$ 에서 2024년 $16\mu\text{g}/\text{m}^3$ 로 33.3% 감소
 -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농도는 38.1% 감소하여 백령도보다 큰 감소폭을 보여, 국내 배출 저감과 국외 배경농도 개선이 함께 진행된 것으로 해석
- 중국 주요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큰 폭으로 감소
 - 2024년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및 주변지역과 장강삼각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2.2\mu\text{g}/\text{m}^3$ 와 $33.0\mu\text{g}/\text{m}^3$ 로, 2017년 대비 각각 33.8%와 31.4% 감소^[25]
 - 한·중 공동연구(Ryoo et al., 2024)에서는 베이징의 농도 감소가 석탄연소·산업·소각로 부문의 기여도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
-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배출량뿐 아니라 강수·풍향·대기정체 등 기상여건과 장거리 이동의 영향을 받으므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단순히 분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제비교)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국제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23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기준, 한국은 $25.9\mu\text{g}/\text{m}^3$ 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OECD 평균($10.9\mu\text{g}/\text{m}^3$)의 약 2.4배이며, WHO 권고기준($5\mu\text{g}/\text{m}^3$)의 약 5.2배
- 정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에서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13\mu\text{g}/\text{m}^3$, 2032년 $12\mu\text{g}/\text{m}^3$ 까지 낮추는 목표를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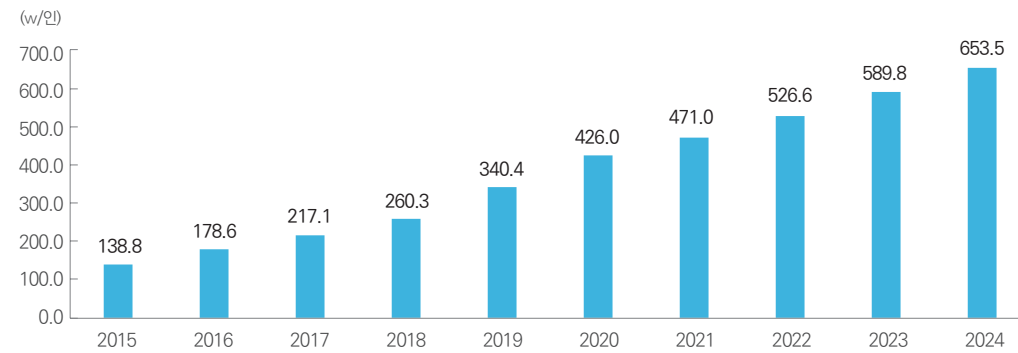
05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가. 재생에너지

➡ 2024년 1인당 재생에너지 설비용량^[26]은 653.5W이나, 국제적으로는 하위권

- 2024년 1인당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53.5W로 2015년 대비 4.7배 증가
 - 1인당 재생에너지 설비용량(W): ('15년)138.8→('17년)217.1→('19년)340.4→('21년)471.0→('23년)589.8→('24년)653.5
- 2023년 한국(589.8W)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
 - OECD 평균(1,671.0W)의 35.3% 수준이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526.4)·체코(446.1)·슬로바키아(438.2)·콜롬비아(273.3)·멕시코(254.0) 5개국뿐
 - 자연조건이 우수한 북유럽·캐나다 등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크고,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1,035.5W)과도 약 1.8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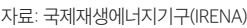
그림 16 |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변화 (2015~2024)



자료: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6] 1인당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정격용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인구 1명당 보유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규모를 나타냄(SDG 12.a.1). 실제 발전량이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그림 17 | 2023년 OECD 국가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나. 재활용 처리 비율^[27]

➡ 2024년 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84.3%로 가장 높고, 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은 54.4%로 가장 낮음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28]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2015년 78.2%에서 2020년 84.3%로 상승한 이후 84%대에서 정체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 ('15년)78.2 → ('20년)84.3 → ('23년)84.4 → ('24년)84.3
- 생활폐기물^[29]은 2019년 이후 하락하여 2021년 54.7%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3년 연속 상승하여 2024년 59.8%로 회복
 -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 ('15년)58.5 → ('18년)59.4 → ('21년)54.7 → ('24년)59.8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30]은 2018년 75.1%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24년에는 54.4%로 낮아짐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 ('15년)63.4 → ('18년)75.1 → ('21년)62.4 → ('23년)58.9 → ('24년)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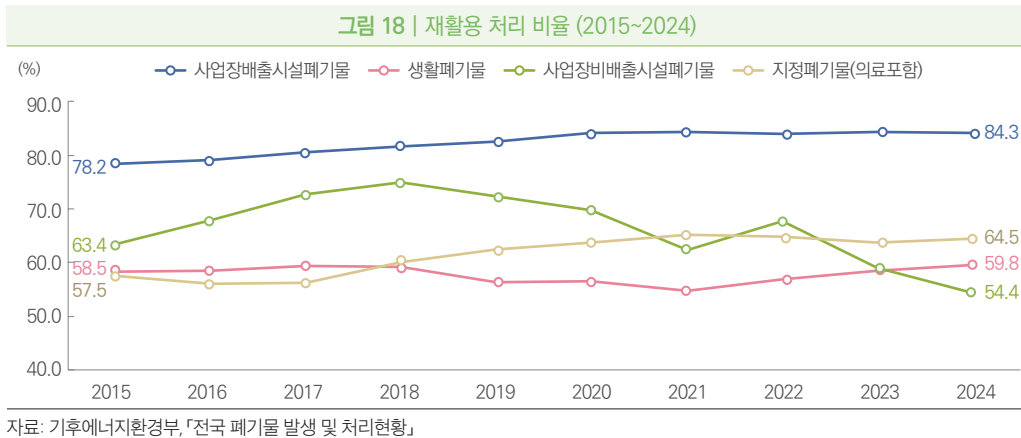
[27] 폐기물을 배출원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재활용 처리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SDG 12.5.1).

[28]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공정잔재물, 비유해성 분진 등)

[29]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일련의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등)

[30] 법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되 배출시설 운영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사무실 폐지, 구내식당 음식물 등)

- 지정폐기물^[31]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2015년 57.5%에서 2024년 64.5%로 7.0%p 상승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64~65% 수준에서 정체
- 지정폐기물 재활용 처리 비율(%): ('15년)57.5 → ('19년)62.5 → ('21년)65.3 → ('24년)64.5



[31] 사업장폐기물 가운데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커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한 폐기물(폐유, 폐산, 의료폐기물 등)

IV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한국 고용시장

“기술 동향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자동화,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은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 변화는 직무 구성과 숙련 수요, 고용 형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 이에 대응하여 'IV. 기술 동향'에서는 향후 고용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기술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해당 기술의 발전 단계와 활용 방향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조기경보(Early Signal)'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보고서의 특징

- (핵심 기술 동향) 자동화, 서비스 로봇, 생성형 AI 등 고용 환경 변화와 관련있는 주요 기술의 발전 단계와 산업별 도입 현황 소개
- (정량·정성 통계) 국제 비교 통계, 기술·산업 관련 기초 지표와 함께 전문가 견해 및 주요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 발전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동향 정보를 제공
- (기회와 위험의 균형)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논의보다는, 기존 직무의 성격 변화와 새로운 직무의 생성 가능성을 포함하여 기술 발전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제시

향후 기대효과

- '기술 동향'은 중·장기 고용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의 등장을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연간 '기술 동향' 주제			
제5호(2월)	제6호(5월)	제7호(8월)	제8호(11월)
로봇	AI	자동화	자율주행

※「기술 동향」기획·자문: 허은영 교수
(자원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공학전문대학원)



기술 동향

자동화 기술의 확산과 한국 고용시장

주제 : 자동화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 : 김현진 교수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토론 : 안성훈 교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윤성로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도재영 교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취지 : 노동시장이 산업구조·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 변화현황과 산업 도입 사례,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기계·로봇·AI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01 발제 : 자동화 기술의 성격과 고용에 대한 함의

| 김현진 교수

➡ 자동화는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직무를 과업 단위로 재편하고 생산성과 고용의 구성을 바꾸는 기술임

- 자동화 기술은 기계·로봇·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등이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의미
 - 핵심은 사람의 역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흐름과 사람-기계 간 역할 분담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있음
 - 최근의 자동화는 제조 현장의 반복 작업을 넘어 문서 작성, 고객 응대, 분석, 설계, 프로그래밍 등 사무직·전문직의 일부 과업까지 확장되고 있음
- 자동화의 진행 수준은 사람의 동작을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단계에서 공정 전체를 무인화하는 단계까지 폭넓게 분포
 - (보조형) 김밥 성형기의 경우 재료를 올려놓는 작업은 사람이 계속 수행하되,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압착 동작만 기계가 대신함
 - (대체형) 노르웨이의 고등어 가공 선박은 카메라가 어체의 뼈 위치를 인식하여 절단 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하므로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대형 선박의 승선 인원이 5명 수준으로 축소
 - (지향형) 완전 무인공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로봇 도입을 통한 1인당 생산성 향상은 이미 진행 중

그림 1 | 자동화 로봇을 활용한 자동차 생산



자료 : Tesla

그림 2 | AI 자동화를 통한 고등어 가시 제거



자료 : EBS 다큐 「극한직업 - 노르웨이와 고등어」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같이 ‘운전’을 자동화하는 기술까지 포함하면 자동화의 외연은 매우 넓으며, 최근에는 물리적 자동화·업무 자동화·AI 기반 자동화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함께 활용하는 지능형 통합 자동화가 확산

표 1 | 자동화 기술 구분

구분	주요 기술	대표 적용 사례
물리적 자동화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 무인설비	제조 물류현장(조립, 용접, 물류 이송, 검사, 위험 감지 등) →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 중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1), 자동화 시스템	회계처리, 자료 입력, 보고서 취합, 행정 업무
AI 기반 자동화	생성형 AI, 예측·추천 모델, 컴퓨터 비전, 음성 AI	문서작성, 코딩, 상담, 품질 판정, 수요예측, 설계보조
지능형 통합 자동화	AI + 로봇 + 센서 + 디지털트윈2) + 월드모델 + 클라우드	자율공장, 무인 물류, 지능형 유지보수, 서비스 로봇

주: 1)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는 업무의 진행절차를 정의하고, 각 단계를 자동으로 연결·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

2)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기술로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월드모델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김현진 교수 발제 자료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 전체의 즉시 소멸’보다 직무 내부 과업의 대체·보완·재설계 형태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큼

- (직무 재구성)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표준화 가능한 과업을 우선 대체하며, 사람은 예외 처리, 대인관계, 종합 판단, 창의적 설계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집중하게 됨
 - 정책 설계 역시 직업명 중심에서 과업과 역량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OECD 조사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국내 기업의 56.5%가 기존 직무 안의 특정 과업이 AI로 대체되었다고 응답^[32]

[32] OECD · Korea Labor Institut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in Korea”, OECD, 2025

- (신규 직무 창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와 함께 AI 툴의 유지보수, 로봇 관리, 데이터 관리, 안전 검증, 인간-기계 협업 설계 등 기존에 없던 직무가 확대
 -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빠른 한국에서 자동화는 단순한 인력 대체 수단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수단이 될 수 있음
- (초급·반복 직무에 대한 압박) 초급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먼저 자동화되면서 신입 채용이 감소하고 저숙련 근로자의 재취업 난이도가 상승할 우려
- 기업은 초급 업무를 없애는 데 그치지 말고, AI를 활용하면서도 숙련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경로를 설계할 필요
- (기업 간 격차)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생산성 향상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규모가 작거나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은 편익을 충분히 얻지 못할 가능성
- (알고리즘 관리) AI가 업무 배정, 성과 평가, 채용, 배치에까지 활용될 경우 판단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학술적·정책적 쟁점으로 부상

02 대담 : 주요 논의

[논의 1]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직종·지역

[질문] 김현진 교수 :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분석하여 행정 데이터로 축적하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 도재영 교수

➡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문서화 업무와 단순 반복 업무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자동화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지방에 산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라고 판단됨**

- 매출 100억원 내외, 제조 부문 상주 종업원 20~30명 규모가 전형적이며, IT 적응력이 매우 낮아 문서 관리도 한글·엑셀을 이용한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들 기업의 문제는 자동화로 인한 인력 대체가 아니라 인력이 오지 않는다는 데 있음. 은퇴를 3~5년 앞둔 인력이 여전히 조립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은퇴 이후 누가 조립하고 누가 설비를 설치할 것인가가 현실적 과제로 대두
- 지방 중소 제조업에서 자동화는 효율화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 **방향성은 이미 공유되어 있음에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금·인력·유지보수·데이터의 네 가지 병목으로 요약**

표 2 지방 중소 제조업의 자동화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병목		
병목	현장 실태	정책적 함의
자금	매출 100억 규모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3~5% 수준에 그쳐 설비투자·AI 도입 여력이 부족	국가 과제 매칭 없이는 자력 도입이 사실상 곤란
인력	IT 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신기술이 있어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줄 인력이 없음	기술 자체보다 '활용법을 설명할 사람'의 공급이 관건
유지보수	지방 소재 특성상 로봇 고장·모델 오작동시 신속한 대응을 받기 어려움	지역 단위 기술지원 거점의 필요성
데이터	사내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조립 방법·노하우의 상당 부분이 20~30년 근속 숙련자의 암묵지로 존재	숙련의 디지털화가 자동화의 선행 조건

자료 :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논의 2] 에이전트 AI 확산과 인간·AI의 비용 경쟁

[질문] 김현진 교수 : 초급 회계사 대신 AI 툴을 쓰려는 기업이 나타나는 한편, 초급 업무를 통해 숙련이 형성되던 과정이 사라져 유능한 직원을 키우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AI가 할 수 있는 일도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밝히는 기업도 있음. 문서 작업과 코딩 작업에서 AI의 영향을 어떻게 보는지.

| 윤성로 교수

➡ 최근 기업은 사람의 가격과 인공지능의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 시작

- 특정 업무에서 토큰 비용이 크면 차라리 사람에게 맡기는 선택도 나타나고 있음. 결국 기업에게는 단기 비용과 장기 비용을 포함한 비용의 문제
- 현재는 에이전트 AI 도입의 과도기로, 야심차게 도입하였으나 실제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 이는 AI에 대한 부정적 신호라기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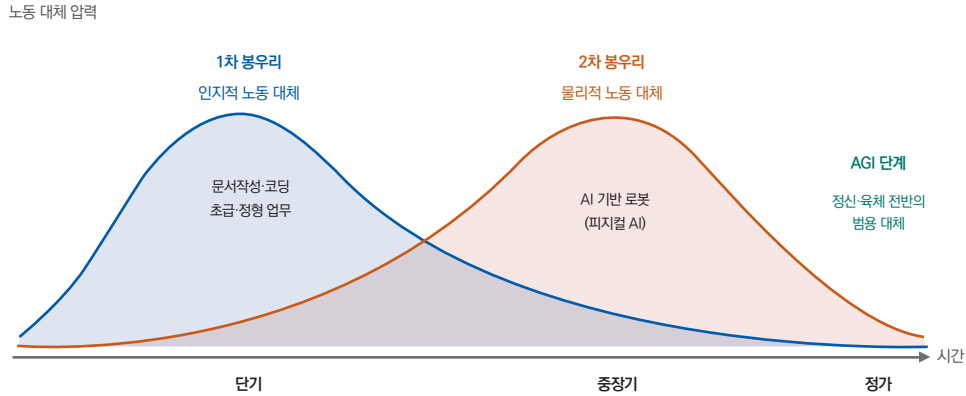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AI 성능이 향상되고 단가가 하락하면 사람이 그 단가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 단기적으로는 사람을 고용하는 편이 저렴한 업무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인간과 AI가 경쟁하는 영역은 오히려 늘어날 전망

➡ 노동을 인지적 노동과 물리적 노동으로 구분할 때, 대체는 두 개의 봉우리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단기) 컴퓨터 작업과 문서 작성 등 인지적 노동에서는 이미 경쟁이 진행 중이며, 관리·고차원 업무를 제외한 기계적·초급 업무의 대체는 상당 부분 예정된 수준
- (중장기) 물리적 노동은 아직 AI 기반 로봇이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나, 피지컬 AI의 발전에 따라 두 번째 대체 국면이 도래할 전망. 다만 그 시점이 중기인지 장기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단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장기) AGI 단계에서는 인지·물리의 구분 없이 대체가 이루어지므로 사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됨

그림 3 | 자동화에 의한 노동 대체의 단계적 전개



자료 : 간담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논의 3] 중소기업의 자동화 도입을 위한 교육·지원 모델

[질문] 김현진 교수 : 중소기업이 AI 툴 또는 툴이 연계된 공정 장비를 도입하기에 앞서 사전에 운영해 보거나 직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의 테스트베드를 두거나 관련 전문인력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 도재영 교수

➡ 도입에 앞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 ‘어떻게 잘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

- 현장 인력을 학교로 불러 교육하면 배운 내용을 다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간극이 발생
- 로봇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배포 환경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동일한 성격의 문제

➡ 현장은 그대로 두고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을 이해한 뒤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

- 교육 내용은 AI를 직접 개발하거나 기술 논문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텍스트북 수준을 넘어 실제로 활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안성훈 교수 : RISE 사업^[33] ‘AI 로봇틱스 봉사단’ 운영사례

➡ 2025년 말 ‘AI 로봇틱스 봉사단’을 구성하여 시흥 소재 중소기업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

-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기업 현장의 AI로봇틱스 전환을 돕는 형태
- (성공 사례) 연간 수백 개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커스텀 메이드 방식의 기업에서 직원의 고령화로 지식을 축적할 방법이 없다는 요구가 제기됨. 카메라와 마이크를 결합한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작업자가 조립 중 지금 수행하는 작업과 유의점을 구술하면 영상과 함께 기록되도록 함. 지식이 상당히 잘 캡처되어 신입사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
- (부분 성공) 사출성형 업체의 불량 검출을 위해 비전 알고리즘을 제공하였으나 완전한 검출에는 이르지 못함
- (한계 확인) 9,500만원 상당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여하여 픽 앤 플레이스 공정에 적용하였으며, 기대한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기업이 현 단계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한 학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대학생생이 보유한 지식만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함을 확인

[논의 4] 재직자 훈련 및 경력 축적 경로

[질문] 김현진 교수 : 기업과 연계하고 대학이 보유한 장비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기관은 많지 않는데, 기존 취업 지원기관에 AI 역량진단·훈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대학이 현장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나은지

| 안성훈 교수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4시간 단위의 단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었음

- ‘AI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인식 제고 수준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음

[33]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반면 대기업 재직자가 풀타임으로 대학원에 파견되는 방식은 효과가 컸음

- 현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연구실에 와서 AI·로보틱스를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함께 일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파견 연구 주제가 반드시 소속 기업과 관련될 필요도 없음
-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풀타임으로 연구실에 파견되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대학내 연구실에 연구과제별 청년 인턴제 할당 검토

- 연구실과 무관한 학생이 들어와 일정 기간 학습한 뒤 산학과제 참여 기업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음
 - 과거 모든 연구과제에 청년 인턴을 포함하도록 한 시기가 존재
- 연구비에 별도 재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청년 인턴제를 운영하면, 청년이 연구실 구성원으로서 최신 AI·로보틱스 연구를 접할 수 있음

➡ 최근에는 대학원생 창업이 늘어 연구실 학생을 그대로 채용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연구실 경험은 일반 기업 취업뿐 아니라 창업팀 합류로도 연결될 수 있음

- 경력직 위주의 채용 관행으로 실무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에게 기술적 접근성과 진로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

[논의 5] 자동화 설비 확대와 숙련 노동 수요 향방

[질문] 김현진 교수 : 자동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설비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 전망이나 근로자 재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인력이 더 나은 업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아울러 AI가 도입되어 초급 업무를 통한 숙련 축적이 어려워지면 AI의 결과물을 검수·보완할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AI가 더 발전하면 숙련 인력조차 대체될 것으로 보는지

| 윤성로 교수

➡ 다양한 업무를 보유한 기업에서는 재배치가 가능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을 조정함으로써 사람의 역할을 줄이고 자동화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정부 지원이나 바우처를 통해 이를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적 합의와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업의 의향도 최대한 존중될 필요
 -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노동자와의 협의 및 법제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
 - 서울대학교 자동화 시스템 공동연구소는 자동화 설비를 대학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하고 이를 수요기업에 이전하는 모델로 출발하였으며, 새로운 자동화의 물결에서 이러한 모델이 다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업종 특화 경량 모델은 국가가 개발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중요한 응용이 될 수 있음**

- 최근 해외에서 고성능 모델이 잇따라 공개되는 등 모델 성능 향상과 경량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여러 기업이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가 정부 주도로 배포될 여지가 충분
 - 다만 실행력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세부 설계가 더 면밀히 채워질 필요

➡ **단순 업무 위주로 AI가 도입되어 초급 업무를 통한 숙련축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모든 숙련 노동까지 대체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숙련의 정도가 높지 않은 분야는 누구나 AI를 활용하여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겠으나, 연구와 같이 숙련의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는 AI를 사용한다고 하여 숙련자를 따라잡기 어려움

➡ **콜센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I 도입 이전에 존재하던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성과 차이가 AI 도입 이후 급격히 축소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 기계적이고 단순한 업무, 즉 숙련의 벽이 높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분야가 이에 해당
 - 반대로 요리와 같이 숙련의 폭이 매우 넓은 분야는 대체가 쉽지 않을 것

03 종합 및 시사점

➡ 자동화의 고용 영향은 직업 단위의 소멸이 아니라 과업 단위의 재편으로 먼저 나타나므로, 정책 대상 역시 직업명이 아닌 과업과 역량 단위로 설정할 필요

- 직무 내부에서 어떤 과업이 대체되고 어떤 과업이 남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고용 총량 지표만으로는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움
- 고용 총량뿐 아니라 업무시간, 임금, 채용, 이직, 숙련 변화까지 함께 추적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됨

➡ 사무·문서 영역의 대체 압력과 지방 중소 제조업의 인력 부족은 성격이 다른 문제이므로, 동일한 지원 수단을 적용하기 어려움

- 전자는 전환 속도와 그 부담을 관리하는 문제인 반면, 후자는 자동화 없이는 생산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생존의 문제
- 특히 지방 중소 제조업의 숙련 인력이 3~5년 내 은퇴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화 지원과 숙련 이전(移轉) 지원은 동시에 설계될 필요

➡ 중소기업의 제약은 자금이 한정되지 않으므로, 설비 보조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활용법을 설명해 줄 인력, 유지보수 접근성, 암묵지의 디지털화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
- 현장 인력을 외부 교육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방식보다,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공정을 이해한 뒤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단기·집합 교육(4시간 단위)은 인식 제고에 그쳤던 반면, 재직자를 대학 연구실에 상당 기간 파견하는 방식은 효과가 컸다는 경험은 재직자 훈련 설계에 참고할 만함

➡ 초급 과업의 자동화로 청년의 숙련 형성 경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강할 필요

- 대학 연구과제에 청년 인턴 재원을 추가하는 방식은 청년이 최신 기술을 접하고 산학 연계 기업 취업이나 창업팀 합류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수 있음
- 다만 연구비를 잠식하지 않는 별도 재원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지적됨

➡ **자동화와 노동시장의 연결 지표는 신규 개발보다 기존 지표의 시계열 추적이 우선**

- 근로자 1만명당 로봇 도입 대수와 같이 이미 통용되는 수치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으며, 스탠퍼드 AI Index 등 기존 조사에 활용 가능한 지표가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
- 피지컬 AI 관련 통계는 조사 대상과 정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지므로, 모집단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 뒤 해석할 필요

➡ **인지적 노동 영역의 대체는 이미 진행 중인 반면, 물리적 노동 영역의 대체 시점은 불확실하므로, 인구 감소의 시간 지평과 함께 검토할 필요**

- 향후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피지컬 AI의 성숙 시점이 이와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자동화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작동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동화 기술의 발전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은 고용 위험 관리인 동시에 인력 부족 대응 수단의 탐색이라는 양방향의 성격을 가짐

표 3 | 간담회 참석자

구분	김현진 교수	안성훈 교수	윤성로 교수	도재영 교수
소 속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 력	UC버클리 기계공학 박사	스탠퍼드 항공우주공학 박사	스탠퍼드 전기공학 박사	위스콘신 컴퓨터공학 박사
주요 분야	자율로봇, AI 기반 로봇제어	정밀공학, 스마트제조, 소프트로보틱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스템
주요 경력	ICRA 로봇학술 수석 편집위원	제30대 한국정밀공학회 회장('25.1~'12)	제2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20.2~'22.5)	MS·Amazon AI 선임연구원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이슈 분석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이슈 분석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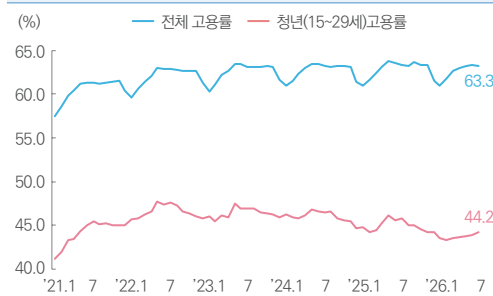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 백기홍 경제분석관(02-6788-4750)

01 검토 배경

➡ 전체 고용여건은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가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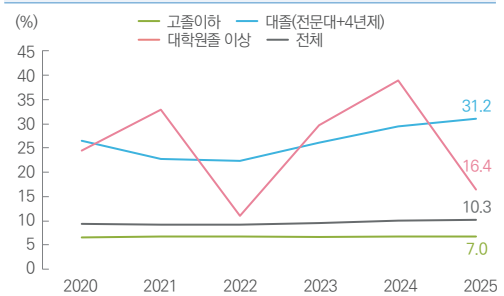
-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서 2026년 7월 44.2% 수준으로 2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지속
 - 청년 취업자 수 증감 폭은 2022년 1월 32.1만명 증가를 정점으로 2022년 11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
- 특히 취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에 주목할 필요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 없이 '쉬었음'으로 분류된 15~29세 인구는 2025년 2월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6년 7월 기준 36.7만명으로 9.0% 수준
 -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이 최근 높게 나타나는 등 고학력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모습

그림 1 | 고용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 학력별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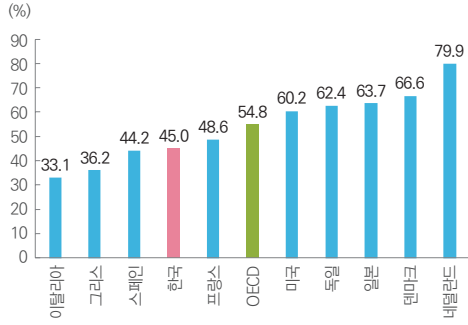
주: 학력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 우리나라 청년층은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 고용률이 낮고 니트(NEET) 비율은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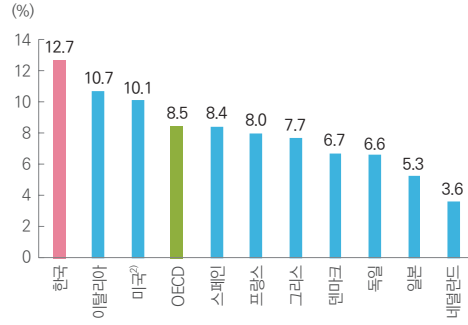
-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25년 기준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낮은 수준^[34]
- 고용·교육·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그림 3 | 2025년 주요국 청년(15~29세) 고용률



자료: OECD

그림 4 | 2024년 주요국 청년(15~29세) NEET rate¹⁾



주: 1)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최근 4주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2) 미국은 2023년 기준
자료: OECD

➡ 이는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고용지표 악화를 경기적 영향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노동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 경직성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및 초기 경력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선 청년의 첫 직장 진입 후 초기 이행경로를 살펴보고 중소기업 첫 일자리가 안정적인 경력형성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함

[34] 국가별 노동시장 진입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복무 등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는 특성이 있어 국가 간 고용률 비교시 유의할 필요

02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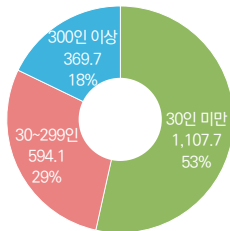
가. 청년의 선호 일자리와 고용구조 간 미스매치

➡ 청년층은 교육 투자에 상응하는 임금과 고용안정성, 향후 경력개발 가능성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수는 제한적

- 대기업·공공부문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구조 사이의 불일치가 큼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4세 청(소)년인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28.7%), 공기업(18.6%), 국가기관(15.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3%에 불과
 - 한편 2026년 6월 기준 30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1,701.7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2,071.4만명의 약 82.2%를 차지^[35]
-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도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정규-비정규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
 - 300인 이상 기업 월평균임금은 632.3만원, 300인 미만 기업은 336.2만원으로 약 2배 차이
 - 정규직 월평균임금은 456.7만원, 비정규직은 192.1만원으로 약 2.5배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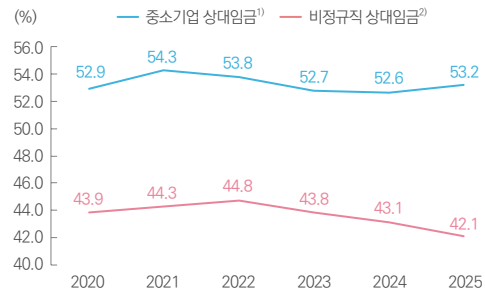
그림 5 | 기업규모별 종사자 비중(2026.6.)

(만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6 | 기업규모 및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추이



주: 1) 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 월평균임금*100

2)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정규직 월평균임금*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 최근 채용환경 변화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준비가 확대되며 구직기간도 장기화되는 모습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구조 간 격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의 일자리에 즉시 진입하기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준비와 대기를 선택할 유인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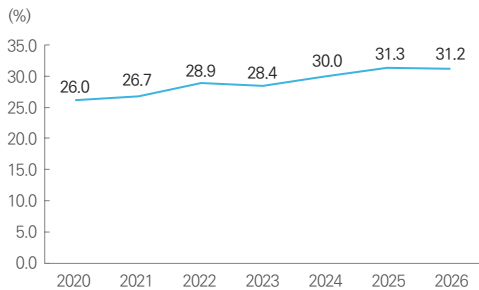
[35] 중소기업기본통계에 따르면 매출액기준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는 2023년 기준 80.4%를 차지

- 특히 수시채용이 주요 채용방식으로 자리 잡고 직무중심·경력직 채용이 강화되면서 취업이전부터 직무 관련 경험과 역량을 축적해야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방식은 ‘수시채용만 실시’ 54.8%, ‘정기공채와 수시채용 병행’ 35.0%으로 나타났으며, 신규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 67.6%로 나타남
- 2026년 5월 기준 졸업 후 첫 취업(임금근로)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31.2%로 2020년 26.0%에서 5.2%p 상승

➡ 동시에 중소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유입에서 청년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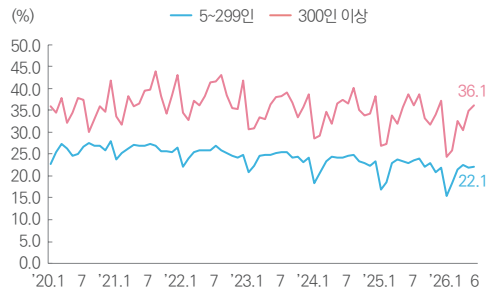
- 2026년 상반기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부족률^[36]은 2.6%로 300인 이상 기업(1.4%)보다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37]
 - 2025년 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28.9%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력(21.9%)보다 전문인력(37.0%)의 부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됨^[38]
- 전체 고용에서 300인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나, 신규 인력 유입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20~29세 비중은 2026년 6월 기준 5~299인 기업 22.1%, 300인 이상 기업 36.1%로 나타남

그림 7 | 청년 첫 취업 소요기간 1년이상 비중 추이



주: 매년 5월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

그림 8 |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청년(20~29세) 비중 추이



주: 사업체규모별 전체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청년 비중
자료: 고용행정통계

[36]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37]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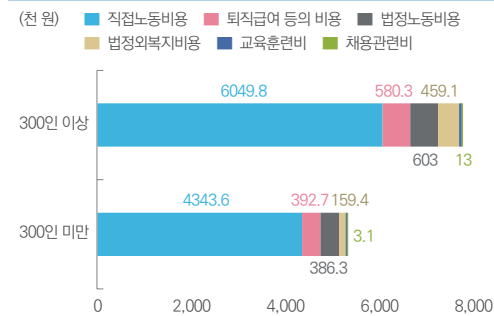
[38] 노만석,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

나. 기업 간 격차와 경력 사다리의 문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뚜렷한 상황에서는 첫 일자리 진입 이후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숙련축적 여건이 달라지고 이후 노동시장 이행경로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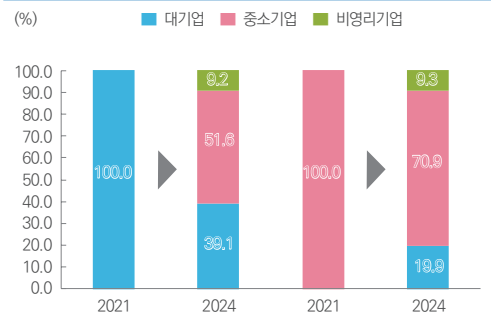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임금뿐 아니라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안정성 및 업무숙련·경력개발 기회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
 - 2024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법정외복지비용 및 교육훈련비는 166.5천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505.9천원) 대비 32.9% 수준
 - 또한 2025년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정규직 비율은 54.7%, 비정규직은 32.5%로 나타남^[39]
- 이러한 일자리 조건의 격차는 인적자본축적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진입한 일자리에 따라 이후 노동시장 이동경로를 서로 다르게 형성할 수 있음
 - 실제 기업규모간^[40]이동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동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2021년에서 2024년 3년 내 일자리를 이동한 청년(15~29세) 중 중소기업 → 대기업 이동률은 19.9%인 반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동률은 70.9%로 나타남

그림 9 |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자료: 고용노동부,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9.30.

그림 10 | 청년이동자의 기업규모간 3년내 일자리 이동률



자료: 국가데이터터치, 「일자리이동통계」

[39] 국가데이터터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5. 10. 22.

[4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영리성이 있는 기업체를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

➡ 한편 기업이 경기·인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규직을 고용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청년의 경력연속성과 이후 이행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조정비용 또는 경기·인력수요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기업은 정규직 채용보다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한 근로형태를 활용할 유인이 있음
 - OECD(2022)^[41]는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과 경영상 해고의 요건·절차 및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유인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
-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종료와 재취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미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직무경험과 숙련의 연속적인 축적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특히 미취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존 숙련을 활용·축적할 기회가 줄어들어 이후 취업과 임금에도 불리한 영향이 누적될 가능성

[4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

03 최근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가.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 ➡ 기존 노동경제학 논의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경험하는 일자리의 특성과 초기 이행경로가 이후의 고용성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분단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이 고용안정성과 임금, 승진 및 훈련기회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1차 노동시장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및 경력개발 기회가 제한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42]
 - 인적자본이론은 교육과 직업훈련, 직무경험을 통해 축적된 숙련이 생산성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43]
 - 일시적인 실업 충격이 장기적인 고용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력효과에 대한 논의도 존재^[44]
- ➡ 실증연구에서도 청년기 미취업 경험과 비정규·임시직 등 초기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이후 노동시장 이행 및 임금·고용성과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연구에서는 임시·기간제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임금과 훈련기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이동을 위한 가교 또는 기업이 근로자와 일자리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선별기제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시^[45]
 - 국내 연구는 청년기 니트 경험과 비정규직 근무가 이후 안정적인 고용으로의 이행을 제약할 수 있으며, 그 불리함은 미취업 지속기간과 담당업무의 숙련수준, 인적자본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46]
 - 최근 연구는 특정 시점의 고용형태보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형성되는 일자리 이행경로에 주목하며, 청년층의 초기 경력 경로가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안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을 제시^[47]
 - 다만 기존 국내 연구는 주로 청년기의 미취업 경험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전환에 초점을 두어, 첫 직장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한 초기 노동시장 이행경로에 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42] Peter B. Doeringer and Michael J. Piore,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Heath Lexington Books, 1971.

[43] Gary S.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44] Christopher A. Pissarides, *Loss of Skill During Unemployment and the Persistence of Employment Shock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4, 1992.

[45] Alison L. Booth, Marco Francesconi, and Jeff Frank, *Temporary Jobs: Stepping Stones or Dead Ends?*, The Economic Journal, vol. 112, no. 480, 2002; Boockmann, Bernhard, and Tobias Hagen, *Fixed-Term Contracts as Sorting Mechanisms: Evidence from Job Durations in West Germany*, Labour Economics, vol. 15, no. 5, 2008.

[46] 남재량·김세움,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정책자료 2013-09, 한국노동연구원, 2013; 정동일·권순원, "가교 혹은 함정? 노동시장 구조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전환에 대한 연구," 「인사조직연구」 제24권 제2호, 2016.

[47] 오소욱·이다인·공민정, "청년층 초기 일자리의 시퀀스 특성이 경력정착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OMA와 CatBoost 기법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6권 제3호, 2023

나. 자료 및 분석방법

➡ 본고에서는 청년패널2021(YP2021)을 활용하여 첫 직장 입직 후 1~3년의 노동시장 상태를 추적^[48]

- 첫 일자리는 청년이 처음 진입한 주된 임금근로 일자리로 정의하였으며, 단기 아르바이트성 경험^[49] 등은 분석 기준에 따라 제외
- 기업규모는 노동시장 부문의 대리변수로 이동방향을 곧바로 일자리 질의 상승·하락으로 해석하지 않고 임금변화를 함께 확인
 - 기업규모는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을 대기업·공공,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구분
- 첫 직장 진입 이후 3년간의 이행경로를 부문과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각 경로가 임금·처우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상향이동과 미취업 이탈을 각각 가르는지를 확인
 - 이행경로는 첫 직장과 동일한 사업체에 재직한 경우는 '유지', 기업 규모 간 이동한 경우는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 첫 직장과 다른 사업체로 이동하였으나 기업규모 구분이 동일한 경우는 '수평이동'으로 정의
 - 미취업 상태는 해당 시점에 진행 중인 일자리가 관측되지 않는 경우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괄하며 군복무는 해당 시점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종사자의 지위가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인 경우는 자영업 등으로 구분

다. 분석결과^[50]

➡ 첫 직장 이후 이행경로는 출발 부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이 낮고 상향이동 비율은 낮은 반면 미취업 비율은 높게 나타남^[51]

- (유지비율) 첫 직장 유지비율은 중소기업 출발자보다 대기업·공공 출발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부문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짐

[48]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경제활동 및 일자리 경험 등을 매년 추적하는 종단면조사로, 청년패널2021(YP2021)은 2021년 당시 만 19~28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만 2천명 규모의 새로운 코호트를 구축. 자세한 방법론은 [Box 1] 참고

[49]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일용직, 초단기 시간제 근로자(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직)

[50] 본 분석은 분석 표본이 첫 일자리 진입 및 3년 후 상태 관측이라는 조건으로 이미 제한되어 있고 4차 종단면 가중치는 전 차수 응답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무가중 결과를 주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시에도 주요 결과는 동일하였음. 청년패널(YP2021)은 1차 조사에서 조사이전 일자리에 대한 회고조사를 포함하고 있어, 2021년 이전 진입 코호트가 존재하며 본 분석에서는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되 입직연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음. 또한 본 분석은 첫 직장 진입 후 초기 3년의 이행경로를 대상으로 하여 이후 재취업이나 추가적인 이동 가능성까지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초기 경로의 제약이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지속되는 지는 향후 추가분석이 필요

[51] 선택편의 가능성(selection bias)을 검토하기 위해 첫 직장 진입 이전에 결정되는 관측가능한 배경변수(성별·입직연령·수도권거주·학력·부모 학력·부친직업·입직연도)로 성향점수를 추정하여 역확률가중(ATT)을 적용한 결과(N=4,015), 대기업·공공부문 도달률 격차는 보정 후에도 유지된 반면(7.6%p→7.5%p) 미취업 상태 격차는 축소됨(5.0%p→2.8%p). 수능 성적을 배경변수(N=2,323)에 추가한 경우에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남. 다만, 내재적 역량, 구직 적극성 등 관측되지 않은 특성에 따른 선택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 입직 3년 후 첫 직장에 계속 재직한 비율은 대기업·공공 출발자가 68.9%, 중소기업 출발자가 59.2%
- 부문 간 격차는 1년 후 4.9%p, 2년 후 7.7%p, 3년 후 9.7%p로 나타남
- (기업 규모 간 이동) 입직 3년 후 중소기업 출발자의 대기업·공공부문 이동비율은 4.7%인 반면 대기업·공공 출발자의 중소기업 이동비율은 3년 후 11.2%로 나타남
 - 대기업·공공 출발자의 대기업·공공 이동비율은 12.4%로 나타나 출발 유형에 따라 대기업·공공으로 이동에 차이 존재
- (미취업비율) 특히 중소기업 출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취업 상태 비율이 빠르게 증가
 - 중소기업 출발자의 3년 후 미취업 상태 비율은 11.4%로 대기업·공공 도달비율보다 약 1.8배 높음

표 1 | 첫 직장 기업규모별 h년 후 노동시장 이행경로

(단위 : %, 명)

		유지	상향 이동	수평 이동	하향 이동	미취업 이탈	자영업 등	N
대기업·공공 출발	h=1	84.5	-	8.3	2.3	5.0	-	1,730
	h=2	76.6	-	11.0	6.3	5.6	0.5	1,382
	h=3	68.9	-	12.4	11.2	6.5	1.1	1,035
중소기업 출발	h=1	79.6	1.5	11.3	-	7.1	0.5	4,620
	h=2	68.9	3.0	17.4	-	9.5	1.2	3,734
	h=3	59.2	4.7	22.5	-	11.4	2.2	3,00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YP2021(1~4차 자료)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직자만 한정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발자에서는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지속 등 서로 다른 이행경로가 함께 나타남

-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발자 중 이직자의 44.2%는 부문 내 정규직으로 이동하여 일부 안정성이 개선되는 모습
 -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발자 중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한 비율이 17.6%로 중소기업 정규직 출발자(14.4%)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출발하더라도 비정규직이면 다음 직장도 비정규직으로 가는 이동률이 정규직 출발자보다 높게 나타남
 - 중소기업 비정규직 출발자의 32.1%는 3년 후에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머무름

표 2 | 첫 직장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이직자의 3년 후 노동시장 이행경로

(단위 : %, 명)

	대기업공공 정규직	대기업공공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자영업 등	N
대기업공공 정규직	45.1	6.2	34.5	8.9	5.3	113
대기업공공 비정규직	28.2	21.1	33.1	14.1	3.5	142
중소기업 정규직	11.5	2.9	67.1	9.4	9.1	416
중소기업 비정규직	10.3	7.3	44.2	32.1	6.2	46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YP2021(1~4차 자료)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중소기업 내 이동에서도 임금과 보상 조건의 개선을 동반하였으나 개선 폭은 대기업·공공부문 이동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 부문 간 경로에 따른 성과 차이는 여전히 존재

- 중소기업에서 출발해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68.4%가 실질임금이 상승하였으며, 개인별 실질임금 변화율의 중위값은 10.6%로 나타남
 - 중소기업 내 이동자의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에 종사한 비율은 첫 직장 당시 50.7%에서 이동 후 66.6%로 상승하였고, 시간외수당은 39.6%에서 45.3%로 높아지는 등 일부 보상항목의 제공도 확대됨
- 다만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이동한 청년은 중소기업 내 이동자보다 임금과 보상항목에서 더 큰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공공부문 이동자의 실질임금 상승 비율은 73.2%로 중소기업 내 이동자보다 높았으며, 개인별 실질임금 변화율의 중위값도 16.7%로 중소기업 내 이동자를 상회
 - 상여금은 49.1%에서 77.7%로, 시간외수당은 41.1%에서 65.2%로 상승하여 보상항목 제공의 확대 폭도 대기업·공공부문 이동자에서 더 크게 나타남

표 3 | 중소기업 출발자의 이행경로별 3년 후 일자리 조건 변화

(단위 : %, 명)

	실질임금 상승자 비율	실질임금 증가율 중위값	상여금 지급 일자리 비율	시간외수당 지급 일자리 비율	N
중소 → 중소	68.4	10.6	50.7→66.6	39.6→45.3	494
중소 → 대기업공공	73.2	16.7	49.1→77.7	41.1→65.2	112

주: 1. 실질임금은 첫 직장과 이동 후 일자리의 월평균임금을 각 관측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이용하여 불변가격으로 환산. 실질임금 변화율은 동일 응답자의 첫 직장 임금과 이동 후 임금을 개인별로 비교하여 산출하였으며, 표에는 개인별 변화율의 중위값을 제시

2. 임금 분석은 첫 직장과 이동 후 일자리의 임금이 모두 연·월 급여단위로 관측된 응답자로 한정

3.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은 지급금액이 아니라 제공 여부로 조사되므로, 총보수의 변화가 아니라 해당 보상항목의 제공률 변화를 제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YP2021(1~4차 자료)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중소기업 출발자의 상향이동 및 미취업 이탈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조건이 좋을수록 미취업 이탈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으나 상향이동과의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 초기임금이 높고 사회보험 가입 등 공식성이 갖추어진 첫 일자리에서 시작한 중소기업 출발자들은 3년 후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게 나타남
 - 초기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3년 후 미취업 상태 가능성과 유의한 음의 관련을 보임
- 반면 동일한 조건들은 중소기업 출발자들의 대기업·공공부문 도달 가능성과는 뚜렷한 관련이 확인되지 않음^[52]
- 첫 직장이 비정규직일 경우 정규직 대비 3년 내 대기업 도달 확률과 미취업 이탈 확률 모두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비정규직은 이동이 잦은 만큼 상향 사례와 이탈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분화되는 양상으로 파악

표 4 | 이항로짓분석 결과(평균한계효과)¹⁾²⁾

	중소기업 출발자 3년 후 대기업공공 재직		중소기업 출발자 3년 후 미취업 상태	
	(1) 기본 모형	(2) 첫 직장 특성 추가	(3) 기본 모형	(4) 첫 직장 특성 추가
비정규직 여부	0.0739*** (0.0150)	0.0680*** (0.0171)	0.1025*** (0.0153)	0.0388** (0.0181)
ln(시간당 임금)		0.0180 (0.0192)		-0.1235*** (0.0260)
3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³⁾		-0.0084 (0.0122)		-0.0580*** (0.0208)
소영세기업 여부 (30인 미만)		-0.0012 (0.0110)		0.0016 (0.0150)
통제변수	O	O	O	O
N	2,584	2,561	2,928	2,897
종속변수 평균	0.0546	0.0531	0.1175	0.1160

주: 1) 수치는 평균한계효과로 확률 단위로 제시하였으며, 0.01은 1%p의 확률 변화를 의미. 괄호 안은 강건표준오차. ***p<0.01, **p<0.05, *p<0.1

2) 미취업 모형은 중소기업 출발자 전체를 대상으로 3년 후 임금근로 상태 유지 여부를 비교하고, 대기업·공공부문 도달 모형은 3년 후 임금근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규모 간 이동을 분석. 미취업모형과 도달모형은 표본 구성이 상이하므로 두 계수를 직접 비교·대조하는 데는 유의 필요

3)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 여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YP2021(1~4차 자료)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2] 다만 도달 사건이 적다는 점에서 개별 요인의 통계적 식별에는 한계가 있음

[Box 1] 분석방법

① 첫 직장 상태에 따른 이행경로 분석

- 첫 직장 상태가 a인 청년 중 h년 후 상태 b에 있는 비율을 의미

$$\hat{P}(S_{ih} = b \mid S_{i0} = a) = \frac{\sum_{i=1}^N 1(S_{i0} = a) 1(S_{ih} = b)}{\sum_{i=1}^N 1(S_{i0} = a)}$$

- S_{i0} : 개인 i의 첫 직장 상태
- S_{ih} : 개인 i의 첫 직장 진입 h년 후의 노동시장 상태
- $1(\cdot)$: 조건을 충족하면 1인 지시함수

② 중소기업 출발자의 3년 후 노동시장 상태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 중소기업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직장 입직 3년 후 대기업·공공부문 재직여부와 미취업 상태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 모형을 추정

$$\Pr(Y_i^{(m)} = 1 \mid X_i, Z_i) = \frac{\exp(\alpha^{(m)} + \beta^{(m)}X_i + \gamma^{(m)}Z_i)}{1 + \exp(\alpha^{(m)} + \beta^{(m)}X_i + \gamma^{(m)}Z_i)}$$

- $Y_i^{(m)}$: 첫 직장 입직 3년후 대기업·공공부문 재직 여부 또는 미취업 상태 여부
- X_i : 비정규직 여부, 로그 임금, 3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소영세기업 여부 등 주요 설명변수
- Z_i : 성별, 첫 직장 입직 나이, 입직 연도, 수도권 여부, 학력, 산업, 직업 등 통제변수
- $\beta^{(m)}$: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로그오즈의 변화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 로짓계수는 확률변화로 직접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결과는 표본 내 개인별 한계효과를 평균한 평균한계효과(average marginal effect, AME)로 제시

$$AME_k = \begin{cases} \frac{1}{N} \sum_{i=1}^N \hat{\beta}_k \hat{P}_i (1 - \hat{P}_i), & x_k \text{가 연속변수인 경우} \\ \frac{1}{N} \sum_{i=1}^N [\hat{P}_i(C_i = j) - \hat{P}_i(C_i = r)], & C_i \text{가 범주형변수인 경우} \end{cases}$$

- 연속변수의 개인별 예측확률의 미분값을 평균하며, 범주형 변수는 해당 범주(j)와 기준범주(r) 간 예측확률 차이를 평균하여 산출함

주요변수의 기초통계량

	N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기업·공공 재직 여부	2,595	0.0547	0	0.2275	0	1
미취업 상태 여부	2,939	0.1170	0	0.3215	0	1
비정규직 여부	3,006	0.3180	0	0.4658	0	1
시간당 임금(만원)	2,974	1.1884	1.1507	0.3254	0.4931	2.5892
3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3,006	0.8007	1	0.3995	0	1
소영세기업(30인 미만) 여부	3,006	0.7292	1	0.4444	0	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YP202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04 결론 및 시사점

➡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은 첫 일자리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

- 중소기업 출발자는 대기업·공공부문 출발자보다 첫 직장 유지율이 낮고, 3년 후 상향이동(4.7%)보다 미취업 이탈(11.4%)이 더 많이 관찰됨
 - 일자리 조건 개선은 이탈 방지에는 유효하나, 상향이동과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음
- 비정규직 출발자는 정규직 전환과 상향이동이 나타나는 한편, 비정규직 지속과 미취업 이탈도 함께 나타나는 등 이행경로가 분화

➡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입직 이후의 경력전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이러한 초기 이행경로를 고려하면 청년의 취업준비와 대기에는 현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입직 이후 경력전망에 대한 기대도 관련될 가능성
 - 첫 일자리에서 축적한 직무경험이 이후 채용에서 요구되는 직무경험과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이후 이동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축적한 경력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평가·활용되고 경력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의 기대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
 -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남게하는 것과 일자리 진입 이후 성장 및 부문 간 이동은 별도의 과제로 바라볼 필요

➡ 따라서 정책방향은 첫 직장의 직무 경험이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구축하고 이를 청년이 예측할 수 있는 경력전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둘 필요

- (숙련 형성) 첫 일자리에서 축적한 숙련과 경력이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인정·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경력경로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
 - 직무능력은행제 및 고용24 통합경력증명과 연계하여 실제 수행직무, 업무내용, 숙련수준을 NCS 능력단위에 따라 기록·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서 축적한 직무경험이 기업의 채용 및 보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체제와 기업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중소기업 내 안착의 질 향상) 대기업·공공부문으로의 이동만을 경력발전으로 보기보다, 중소기업 내에서도 안착의 질을 높여 경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 내에서도 숙련의 축적이 생산성과 임금·보상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하여, 청년에게는 장기적인 경력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숙련인력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필요

- (고용 연속성 강화) 고용 계약종료나 이직 과정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과 숙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용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
- 비정규직 등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 이전부터 경력상당·훈련·채용매칭 등을 제공하여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취업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

[Box 2] 주요 청년고용정책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지원단계별 분류				2026년 계획 예산·규모
		진입· 채용	적응지원· 근속유지	재직중 역량개발	경력인정· 이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생·졸업생 대상 진로상담, 취업준비 및 일자리 연계	●				1,06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공수당	●				13.5만명, 6,006억원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의 실제 직무를 활용한 인턴·프로젝트형 일경험 제공	●			○	4.5만명, 2,188억원
K-디지털 트레이닝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실무교육	●			○	5.5만명, 4,590억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등이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	1만명, 988억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자신감 회복·취업역량 프로그램 제공	●				1.4만명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를 통한 미취업 청년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채용 후 1년 이내 신입직원 온보딩	●	●			4.8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	●			11.5만명, 9,251억원
청년미래플러스	방송영상미디어, 웹툰, 클라우드, 시험인증 분야 구직지원·재직 중 경력설계·조직문화교육 지원	●	●	●	○	5,400명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훈련	대·중소기업 및 지역 간 AI 훈련 격차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	○	
일학습병행	재직자가 근로와 기업현장훈련을 병행하고 국가자격 취득	●		●	●	
직무능력은행제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				●	
고용24 통합경력증명	경력·자격·훈련·교육정보 24종을 통합하여 증명서 발급				●	

주: ●는 해당 정책의 주된 지원기능, ○는 부수적 지원기능을 의미함.

자료: 국무조정실,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도자료, 2026. 4. 28.; 고용노동부, 각 사업 보도자료.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nabO Population and
Employment Trends & Issues

인구·고용동향 & 이슈

2026년 8월호 | 통권 제7호

발행일 2026년 8월 24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8-002145-08
ISSN	3059-0647

